

균형 발전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1970년대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성장 속도만큼 지역 간 발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정부는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개발 정책의 중요한 정책 지향점이 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대규모 공업 단지가 아닌 적정 규모의 공업 단지를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대도시 주변 도시 및 중소 도시를 육성하고자 했다. 동 계획은 또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

는 농어촌 도시에도 농촌형 공업 단지를 건설하였고, 국토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확장 및 포장 등 정비도 추진하였다.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은 균형 발전 정책 기조를 따라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집중 개발과 수도권 집중 억제제를 함께 추진하였다. 대도시에는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 광역 계획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소 도시에는 제조업, 관광, 대학 등 특화된 생산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편익시설도 확충하였다. 또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공공 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조세 및 금융 지원 차별화가 추진되

었다. 한편 처음으로 20년 계획 주기로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 국토'를 첫 번째 기본 목표로 설정하면서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통합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국제적 발전을 지향하는 '연안 국토축'과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동서 내륙축'을 주요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동서 내륙축은 군산-포항(남부) 내륙축, 인천-속초(중부) 내륙축과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하여 평양-원산(북부) 내륙축도 설정하였다.

국토 종합 계획의 변천

	수입 배경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사회 기반 기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국토 생활 환경의 개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수도권의 과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 기반 확충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환경 자원 사멸에 따른 경쟁력 약화 지속적 지역 개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분산적 지역 개발 계획 국토 이용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 이용 관련 제도 정비 신산업 지대 조성 및 산업 구조 고도화 중합적 고속 교통망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여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 비전과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21세기 통합 국토 실현 목표: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200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분산에 입각한 균형 발전 추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등 국토 공간 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약동하는 통합 국토의 실현 목표: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건설 추진 지방형 국토축 + 다핵 연계형 국토 구조, x형 국토축(7+1) 구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2011-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경쟁력 국경 병행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제 사업 병행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글로벌 녹색국토 목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지역별 특화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 거점 육성, 5+2 광역 경제권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 정책 방향 전환 불가피 경제 성장 잠재력 둔화와 양극화 기후 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 공간 조성과 국토 관리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국가 간 수도권 확보 경쟁 심화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 정책 거버넌스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 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 공간 조성

국토교통부(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 중이었던 2000년대 초반 균형 발전이 국정 과제로 승격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이란 부제로 마련되었고, 16개 시·도별 지역 전략 산업과 지역 연구 사업 육성, 인접 광역 지자체 간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등도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도 수립하여 추진되었다. 한편 기존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지역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제2차 지역발전5개년 계획(2009-2013), 제3차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이 각각 수립 추진되었다.

제2차 지역발전계획은 5+2 광역경제권별 계획 수립과 함께 1, 5+2 광역경제권 구축, 2,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형성, 3, 4+α 초광역개발권 구성, 4, 지방분권-규제 합리와 등 4대 발전 전략으로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한편 제3차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13년 발표한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지역 행복 생활권 기반 확충,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 지역 균형 발전의 지속 추진이란 6개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계획은 이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회복되었고 2019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란 비전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 하에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 추진(분권),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포용),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혁신)을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람, 공간, 산업의 측면에서 각각 1,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2,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산업)이라는 3대 전략을 채택하였다.

국토 계획과 균형 발전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시·도별 계획 통합 지도



삶의 질 향상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중 교육 및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부문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2019년 기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1. 국립대학 육성, 2. 대학혁신지원사업, 3. 산학협력(LINC+), 4. 연구지원(BK21+)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존 자율 역량 강화(ACE+), 특성화(CK), 인문(CORE), 여성 공학(WE-UP), 산업 연계(PRIME) 사업들을 통합하여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사업으로 구분되며, 2019~2021년 3년 동안 자율개선대학 131개 교와 역량강화대학 12개 교, 총 143개 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육성사업(LINC+): 정부의 산학 협력 지원은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산업선도형대학'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구성된다. 2017~2021년 5개년 동안 산업선도형대학 55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0개 교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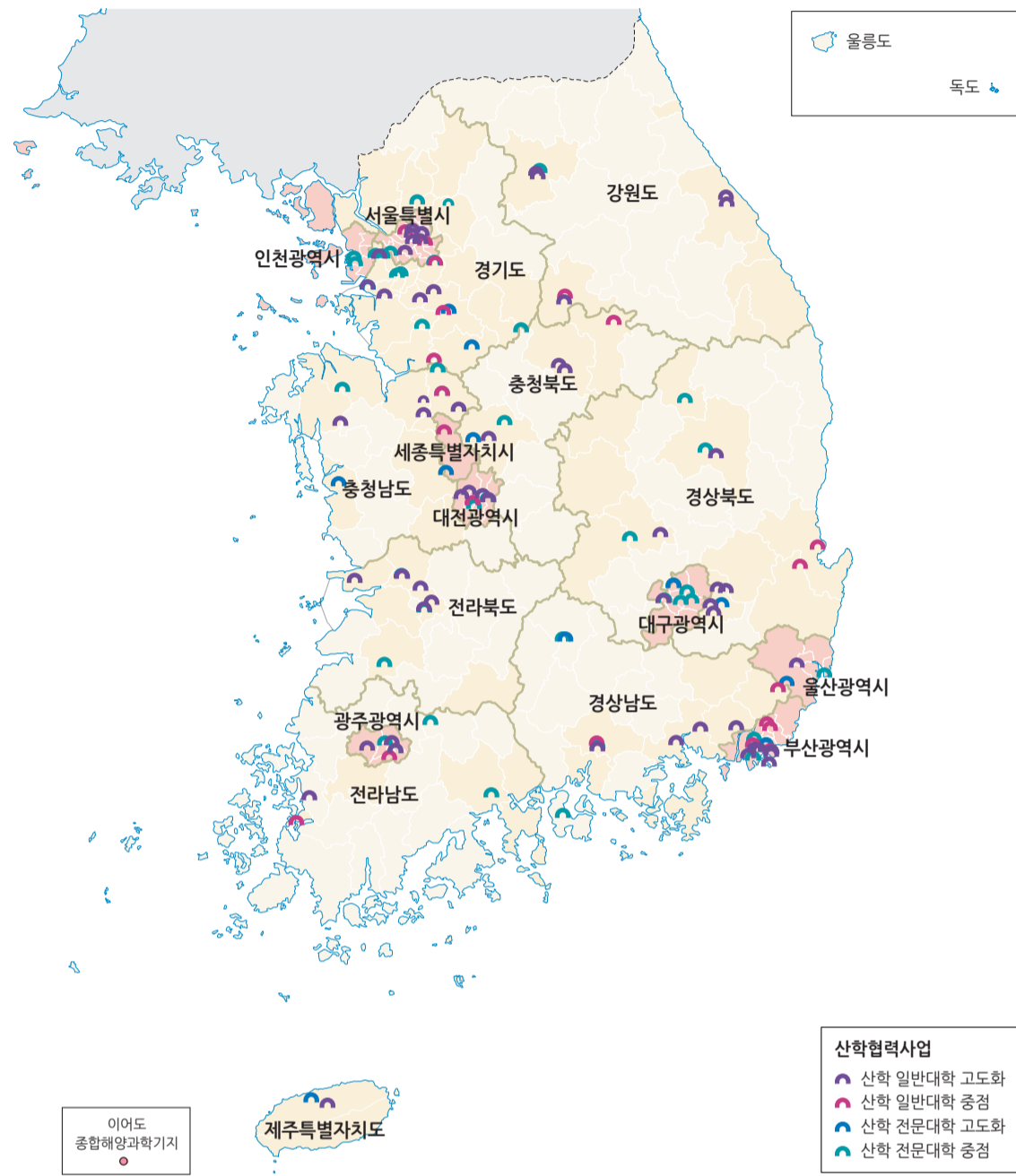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사업: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인친화형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평생직업교육 거점 기관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19년 15개 교와 2020년 10개 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정부의 학술인력양성대표사업인 BK21사업은 1단계(1999~2007), 2단계(2006~2012), 3단계(2013~2020)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4단계(2021~2027)사업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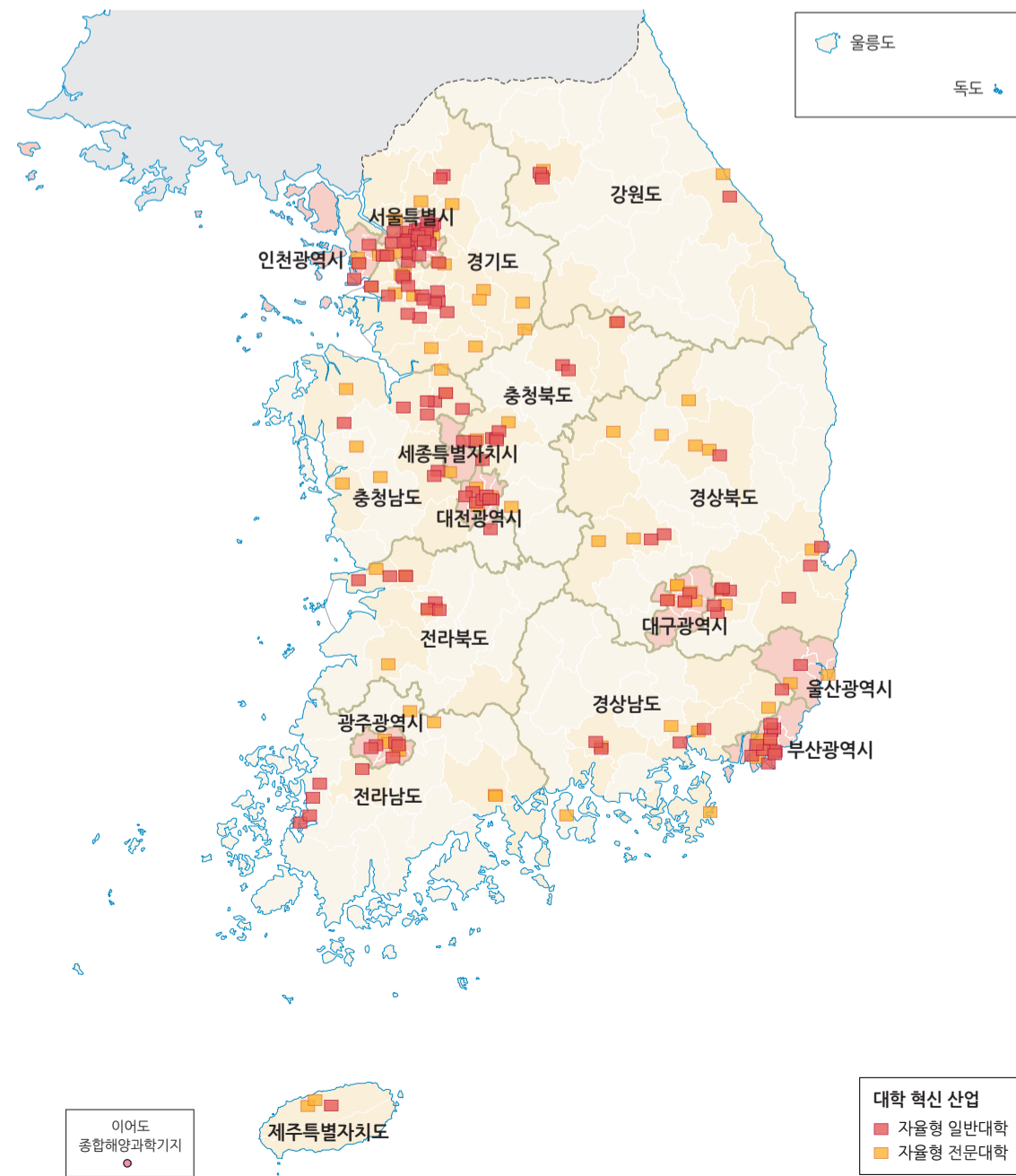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국립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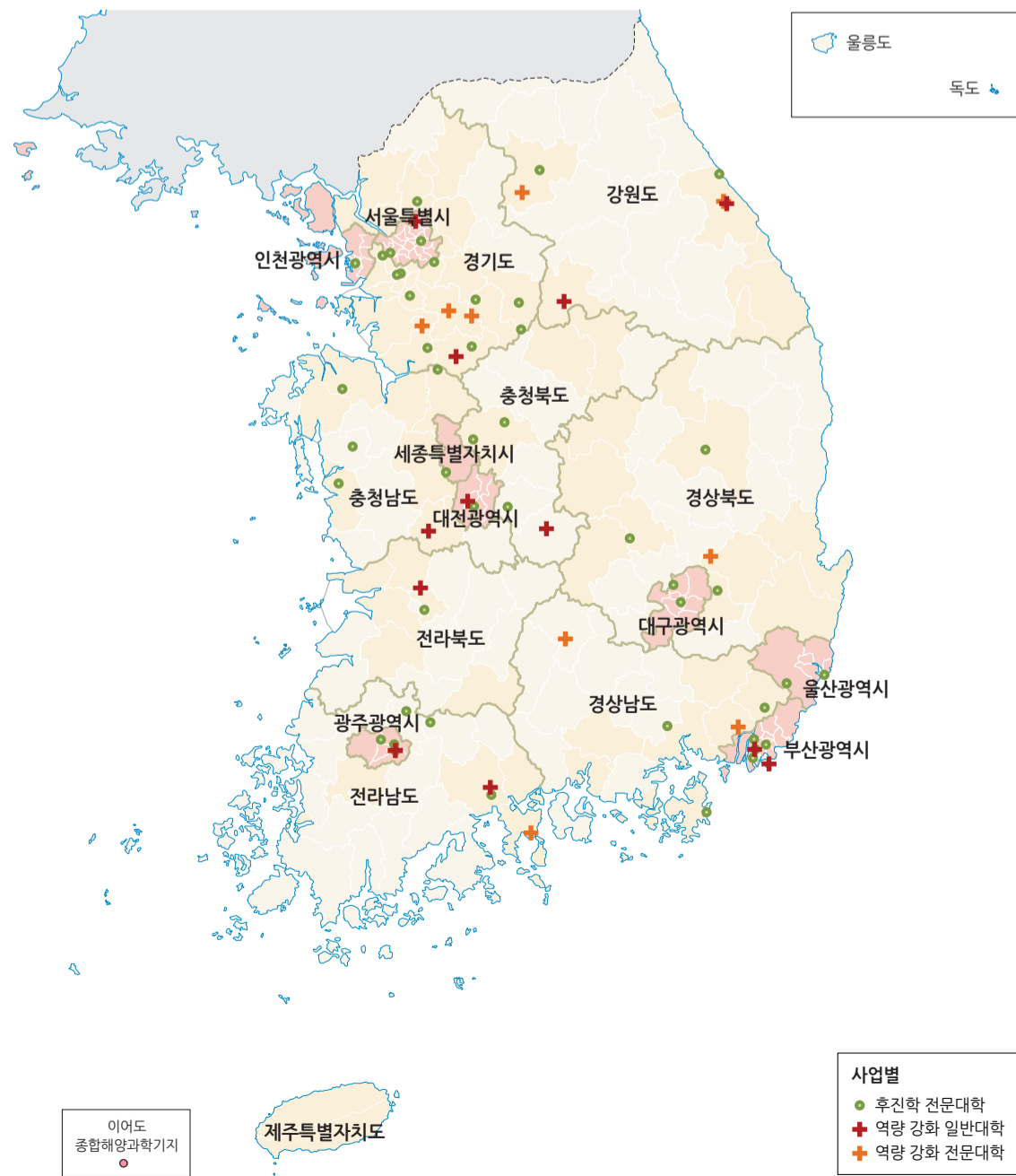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산학 협력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혁신지원사업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후진학 & 역량 강화



국립대학육성사업

수도권	국가 거점 대학	국가 중심 대학	교원 양성 대학
수도권	서울과기대, 한경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국회대, 한국체육대	경인교육대, 서울교육대	
충청 강원권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공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한국교육대
호남 계주권	전북대, 전남대, 계주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청주교육대, 전주교육대
대구 경북권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교육대
동남권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부산교육대, 진주교육대

산학협력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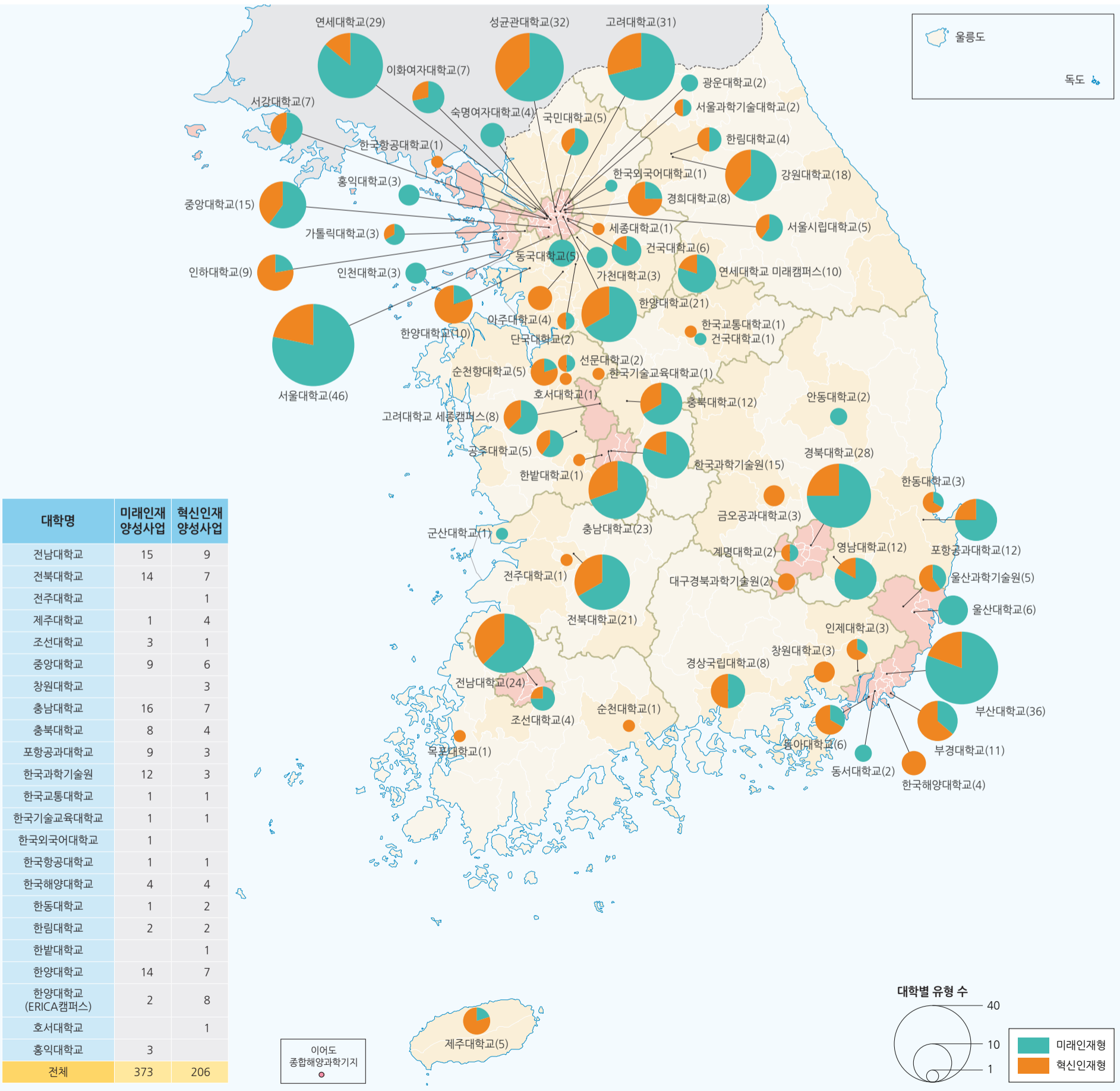
수도권	산학협력 고도화형(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전문대)
수도권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세종대, 명덕대	동아방송예술대, 용인예술과학대, 한양여자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북대, 대림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부천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경인대
충청 강원권	건국대(글로벌),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배재대, 백석대, 세명대, 한라대	아주자동차대, 한국영상대, 충청대	강릉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충청보건과학대, 원일성신대, 연암대
호남 계주권	군산대,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계주대, 조산대, 호남대	경주대, 목포해양대	원광보건대, 계주한라대	서명대, 순천계원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조선이공대
대구 경북권	경문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위덕대, 한동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가톨릭상지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동남권	경남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경남과기대, 경상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정보대, 춘해보건대, 동의과학대	경남도립남해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연암공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	자율협약형(일반대)	자율협약형(전문대)	후진학 선도형(전문대)	역량강화형(일반대)	역량강화형(전문대)
수도권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푸터대, 영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삼광대, 성일대, 성원대, 성신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신촌), 을지대, 이화여대, 인연대, 인제대, 중앙대, 차이과학대, 케이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상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서대, 한신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협성대, 흥익대, 경인교육대, 서울교육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대, 경북대, 농협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대, 동아방송예술대, 중앙미래대, 동원대, 부천대, 서울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서대, 신구대, 영산대, 아주대, 연성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양여대	경기도(한국관광대), 연성대(동서울대-인하공업전문대학), 유한대(한국복지대), 경인대, 대림대(동남보건대, 동아방송 예술대), 한양여자대(동양미래대)	덕성여대, 환경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정창문화대학
충청 강원권	건국대(글로벌), 고려대(세종), 공주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배재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우송대, 중부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공주교육대, 청주교육대, 한국교통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	강릉대, 강원도립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우송보건의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대, 충청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림대	강릉대, 연암대(대전과학기술대-신성대), 충청대(충북도립대-충북보건과학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해진대), 한림성심대(강릉도립대)	건원대, 목원대, 유원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강릉영동대, 송국대
호남 계주권	광주대, 광주여대, 군산대, 동산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계주대, 조산대, 호남대, 호원대, 광주교육대, 전주교육대	광주보건대, 군장대, 기공대학, 동강대, 서명대, 순천계원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공대, 전주한라대, 계주한라대, 계주한림대, 조선이공대, 청람대	광주보건대, 전남도립대(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순천계원대(동강대), 조선이공대	순천대, 우석대, 조산대	조선간호대, 한영대
대구 경북권	경북대, 경문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대구교육대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오경대, 신명대, 수성대, 인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신대	가톨릭상지대, 영남이공대, 호신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성덕대
동남권	경남대, 경상대, 경상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대, 창원대, 부산교육대, 진주교육대	가계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연암공대, 울산과학대, 창원문화성대, 춘해보건대	가계대, 부산과학기술대(동주대-부산여대),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마산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경남정보대(동원과기대, 마산대)

BK21+ 연구지원사업(2021~2027년)

대학명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가천대학교	3	1
가톨릭대학교	2	1
강원대학교	11	7
건국대학교	5	1
건국대학교 GLOCAL (글로벌)캠퍼스	1	1
경북대학교	21	7
경상국립대학교	4	4
경희대학교	2	6
계명대학교	1	1
고려대학교	22	9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5	3
공주대학교	3	2
광운대학교	2	2
국민대학교	3	2
군산대학교	1	1
금오공과대학교	3	3
단국대학교	1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	2
동국대학교	5	5
동서대학교	2	4
동아대학교	2	4
목포대학교	1	1
부경대학교	4	7
부산대학교	29	7
서강대학교	4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1
서울대학교	36	10
서울시립대학교	3	2
선문대학교	1	1
성균관대학교	20	12
세종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4	1
순천대학교	1	1
순천향대학교	1	4
아주대학교	4	4
안동대학교	2	2
연세대학교	25	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	2
영남대학교	10	2
울산과학기술원	2	3
울산대학교	6	3
이화여자대학교	5	2
인제대학교	1	2
인하대학교	3	7
인하대학교	2	7



지역 문화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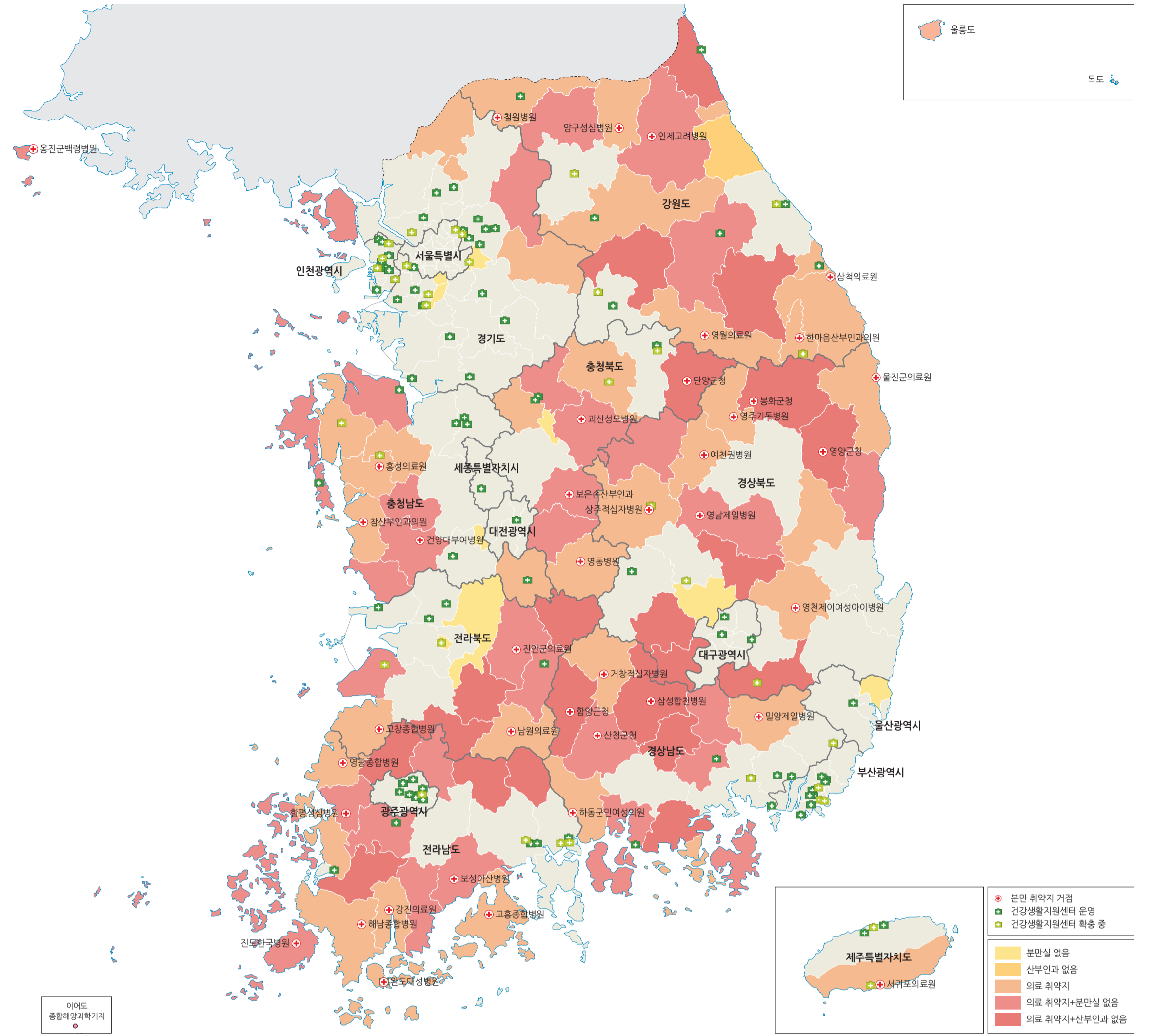
산업 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유형	선정 지역	선정	종료
1	울산	2017	
2	세종 조치원	2017	
3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일대	2017	
4	충청북도 청주시	2017	
5	전라북도 남원시 kbs 남원 방송국	2017	
6	전라남도 광영시	2017	
7	대구 중구 구 KT&G 연초제조창 사택	2016	
8	경기도 수원시 관선구 고색동 산업1단지 폐수처리장	2016	2016
9	경기도 수원시 경기 서울대 농생대(서도동 청년문화 공간)	2016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4386	2016	
11	전라북도 완주군	2016	
12	전라남도 담양군 해동송골광장	2016	
13	영주시	2015	
14	경기도 파주시	2015	
15	경기도 부천시	2015	
16	전라북도 완주군 책마을문화센터	2015	
17	전라북도 완주군 북합문화공간	2015	
18	계주도	2015	
19	폐산업 시설 인천 울진군(구)북항병원	2014	
20	콘텐츠지원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2014	
21	산업 단지 광주 광산구 소촌동	2014	
22	산업 단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시공공구상가 지원동 42동	2014	2015
23	폐산업 시설 경기도 광명시 기차로 85번길 142 자원화수시설 내	2014	
24	폐산업 시설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소각장	2014	
25	산업 단지 경기도 안산시 시화반월	2014	
26	산업 단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농공	2014	
27	콘텐츠지원 강원도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2014	
28	산업 단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014	2015
29	폐산업 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관방재림 주변 숲속창고, 록케방 가 광공장	2014	
30	산업 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단지	2014	

생활SOC사업

분야	시설	현재(2018년말)	미래(2022년 착수기준)
체육	공공체육관	• 13분 내 접근(963개, 2017) 5.3만 명/개소, 선진국 40% 수준	• 10분 내 접근(1,400여 개) 3.4만 명/개소, 선진국 60% 수준
	공공수영장	• 22분 내 접근(406개, 2017) 12.6만 명/개소, 선진국 25% 수준	• 15분 내 접근(600여 개) 8.5만 명/개소, 선진국 55% 수준
문화	공공도서관	• 12분 내 접근(1042개, '17) 5만 명/개소, 선진국 70% 수준 • 열람실 위주, 노후 20년 이상 34%	• 10분 내 접근(1,200여 개) 4.3만 명/개소, 선진국 90% 수준 • 문화·돌봄 등과 복합, 노후 시설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 시·군·구당 0.6개(141개)	• 시·군·구당 1.3개(300개)
기반시설	LPG 배관망	• 1.3만 세대 3개 군, 136개 마을	• 5.5만 세대 13개 군, 320개 마을
	주차장	• 연평균 1천 면 공급	• 3년 간 1.1만여 면 공급 / 110여 개소
자녀돌봄	공공부녀어린이집	• 공보육 23.2% 6,090개(수혜 아동 35.4만 명)	• 공보육 25.2% 6,090개(수혜 아동 35.4만 명)
	국공립유치원	• 국공립 취원율 25.4% 12,900여 학급	• 국공립 취원율 40% 12,900여 학급
취약 계층	온종일돌봄 (초·중·고)	• 수혜 아동 36.2만 명 초·중·고별 1.24만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 수혜 아동 53만 명 초·중·고별 1.5만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고령자복지주택	• 2,426호	• 4,000호
공공 의료	공공요양시설	• 시·군·구당 0.5개(110개)	• 시·군·구당 1.1개(240개)
	지역책임 의료기관	• 없음	• 40여 개 지정
안전	주민건강센터	• 시·군·구당 0.3개(66개)	• 시·군·구당 0.5개(110개)
	교통	• 교통사고 사망 3,781명 OECD 상위35개 국(2015)	• 교통사고 사망 2천 명대 OECD 상위30% 수준
주거	화재	• 다중 시설 보강 필요 대상 조사	• 720여 동 보강(필요 대상의 약 50%)
	지역매입주택	• 지하 공간 지도 15개 도시	• 지하 공간 지도 160개 도시
관광	제안	• 우수 저류 시설 91곳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의 47.4%	• 우수 저류 시설 127곳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의 66.1%

지역 의료 환경 개선



농촌교통모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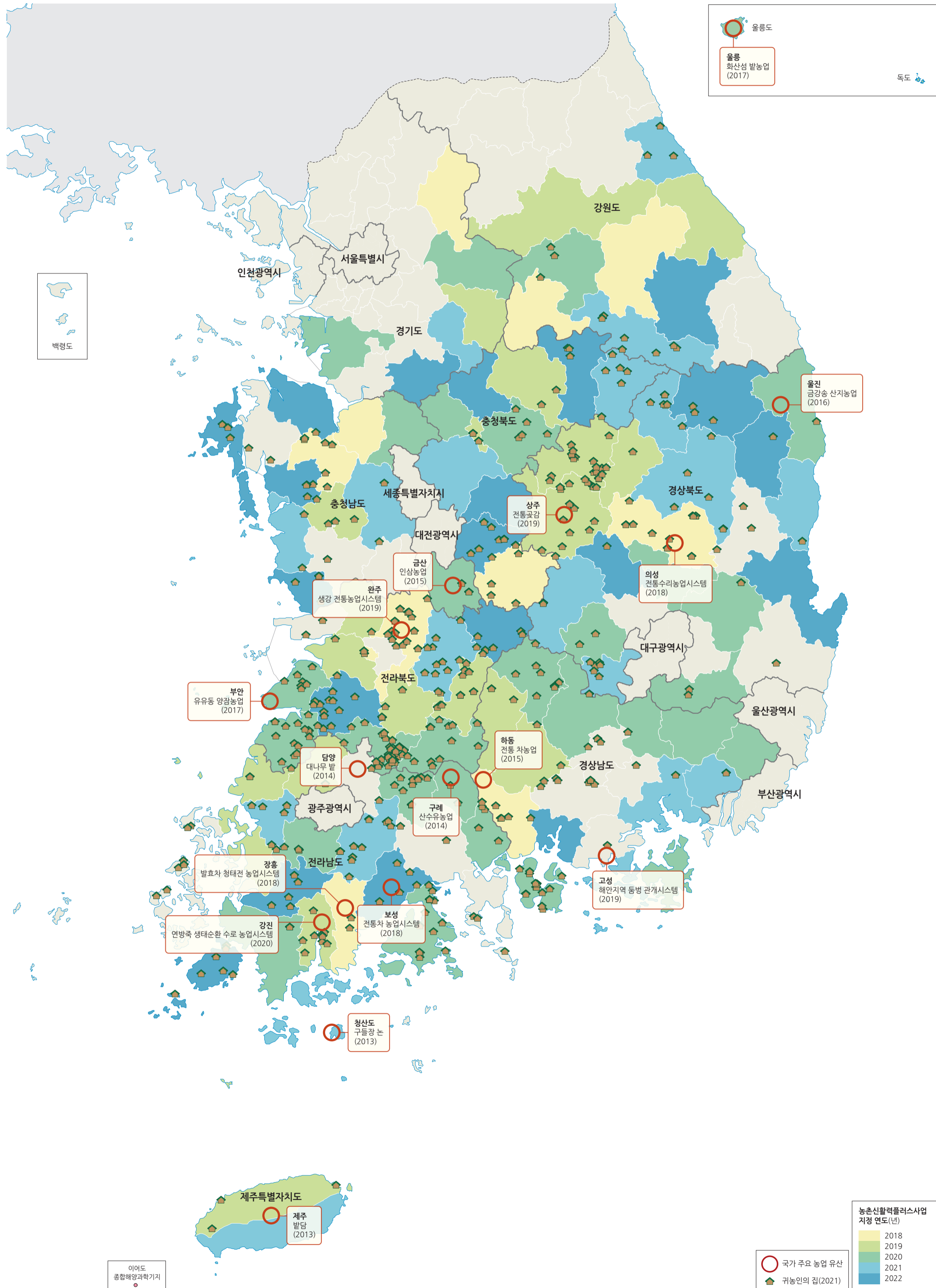
지자체 수(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지자체 수(개)	12	20	17	18	18	76	81
개소 수(개)	13	21	18	18	78	144	156
모델형(개)	버스	6	9	8	8	4	66
	택시	7	12	10	10	74	78
차량 대수(대)	버스	6	9	8	8	3	87
	택시	20	433	1,210	1,249	4,652	4,929
이용자 수(만 명)	4	10	22	29	194	297	195

사회복지 분야 국가 보조금 10대 사업(2021년)

순번	부문	세부 사업	본예산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	총국고보조금 대비 비중
1	노인	기초연금지급	149,635	149,414	30.9	20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경상보조	76,805	76,787	15.9	10.3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6,079	46,062	9.5	6.2
4	아동보육	영유아보육료지원	33,952	33,952	7	4.5
5	아동보육	아동수당지급	22,195	22,191	4.6	3
6	기초생활보장	추가급여지원	19,879	19,454	4	2.6
7	아동보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141	16,141	3.3	2.2
8	취약계층지원	장애인활동지원	15,070	14,879	3.1	2
9	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152	11,678	2.4	1.6
10	주택	다기구매입대출자	31,279	9,384	1.9	1.3
10대 사업 합계			424,186	399,941	82.6	53.5
사회 복지 분야 총지출			1,850,459	483,949	100	64.7
정부 총지출			5,579,872	748,016	-	100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촌 개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산어촌의 사회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농산어촌의 지역 개발(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점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기점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 5년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어 농산어촌의 지역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특성을 보이는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시행했던 신활력 사업을 계승한 것으로서 향토 자원 육성, 지역 자산 및 민간 조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농촌 신활력 거점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	가평	여주	양평, 화성	이천	
강원	평창,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영월, 양양	정선
충북	영동	증평, 충주	괴산, 진천	청주, 단양	제천, 보은, 옥천, 음성
충남	예산, 아산	청양	금산, 천안	공주, 보령	태안, 당진, 서천
전북	원주	김제, 익산, 임실, 경주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진안	무주, 경음
전남	장흥	영광, 강진, 장성, 무안	고창, 곡성, 광양, 구례, 나주, 해남	완도, 화순, 함평	진도, 영암, (보성)
경북	의성	문경, 상주, 예천	군위, 성주, 영천, 울릉, 울진, 청도	김천, 영덕, 안동, 영주, 고령	포항, 구미, 영양, 봉화
경남	하동	합안, 산청	거제, 거창, 남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창원, 김해, 통영	
제주	-	서귀포	-	제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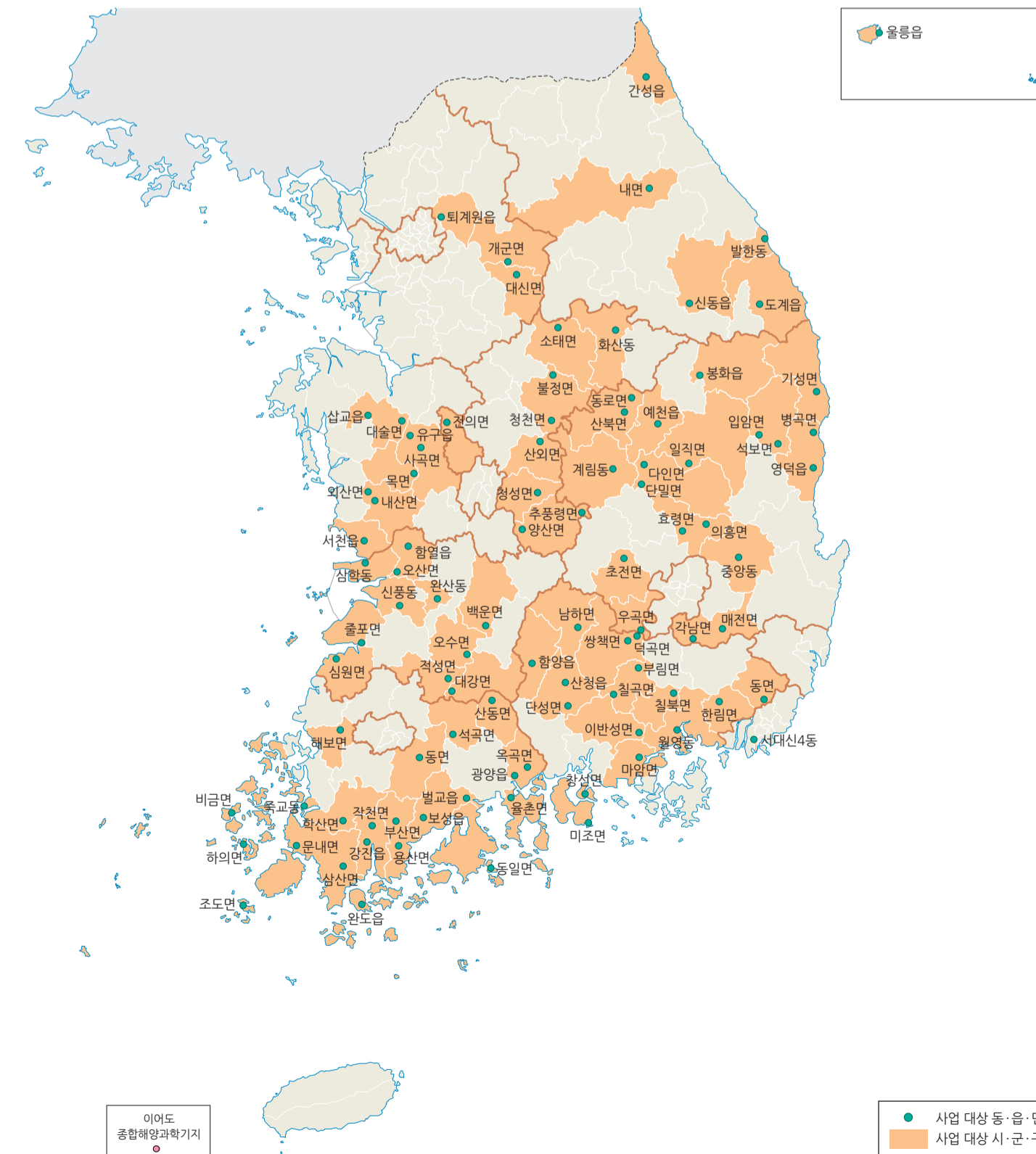
사업 기간은 4년이고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2018년 첫 해에 10개의 거점을 선정하였고, 2019년 20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의 시·군 거점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출한 예비 계획을 토대로 선별한 후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는데, 2021년 현재 2018~2019년 사업들의 기본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다.

국가 주요 농업 유산

지정 번호	명칭	지정 범위	주요 특징
제1호(13)	청산도 구들장 논	원도청산도 전역(5.0ha)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구들장 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나는 조성
제2호(13)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542ha, 22, 108km)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3호(14)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228ha)	생계 유지를 위해 밭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제4호(14)	담양 대나무 밭	담양읍 삼다리(56.2ha)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축조역과 대나무숲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제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제5호(15)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면(297ha)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제갈,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제6호(15)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계면 일대(597.8ha)	생계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베레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제7호(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14,188ha)	왕실시대 황강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제8호(17)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번산면 유유동 일대(58.9ha)	통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로운 우수한 경관
제9호(17)	울릉 화산성 밭농업	울릉군 일대(7,286ha)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따죽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울릉도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고,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폐지형태의 독특한 경관
제10호(18)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삼한시대 조문국시대부터 2,000년의 농업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성면 일대는 약 1,500개의 계면이 좁고, 이를 통해 농업유산을 저장·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제11호(18)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군 일원	새마을운동 기운이 경사지 등 고지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제12호(18)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장흥군 일원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급은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옹달샘 등 구축·전승
제13호(19)	원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	원주군 일원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 수직강하 방식 등이 있음
제14호(19)	고성 해안지역 돌병 관개시스템	고성군 일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돌병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제15호(19)	상주 전통곡감	상주시 일원	'상주군사 전통 풍물보존을 통한 감 재배 적지정선·관리·가공 등 곡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제16호(20)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강진군 좌천면, 병영면	1개의 연방죽과 200여개의 돌병, '병영성'과 수로 등 독특한 하천식물순환 수리체계보전, 한들평야와 연방죽의 특별한 경관형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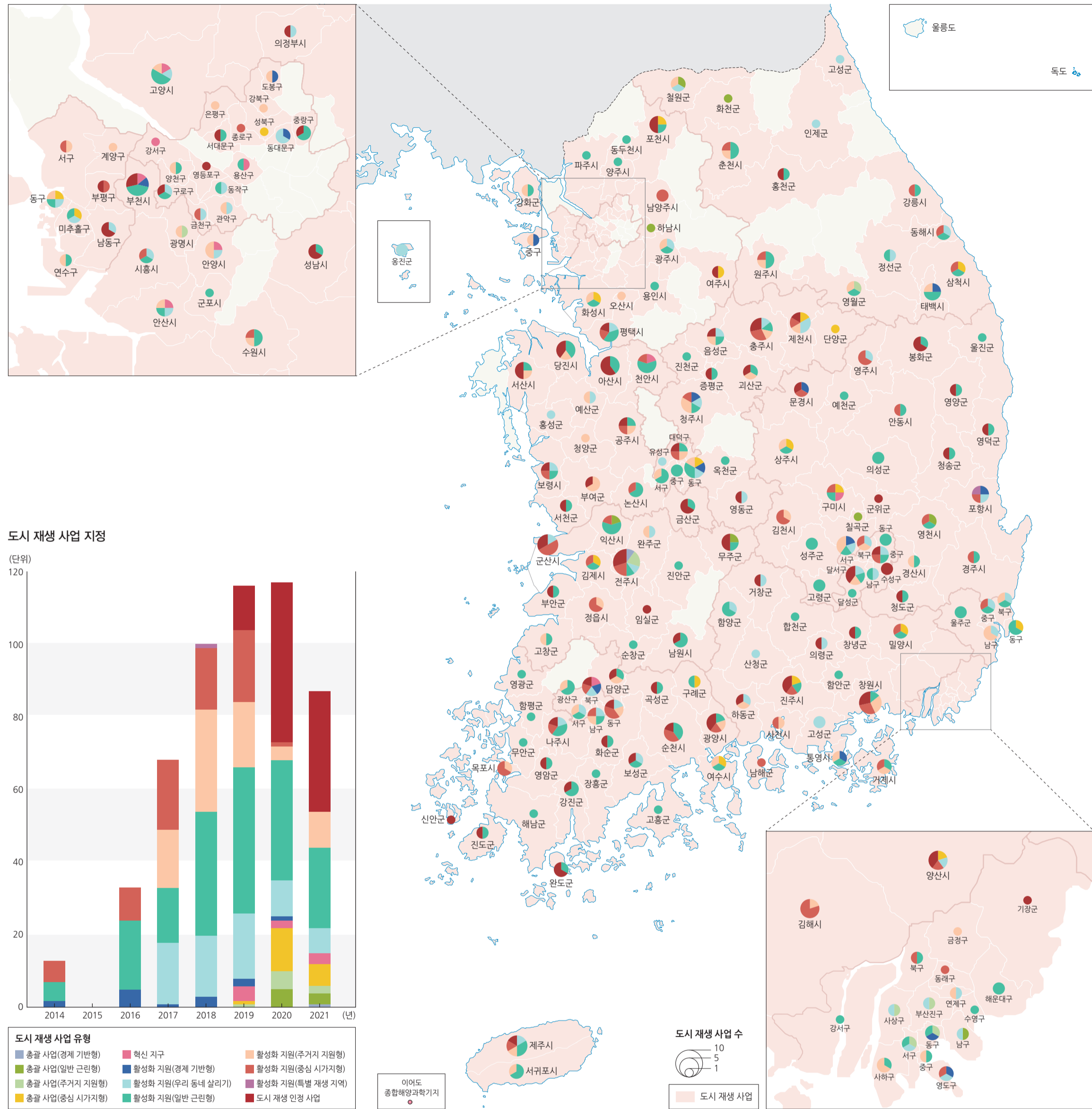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유무형의 농업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역사성과 지속성, 생계 유지, 고유한 농업 기술, 전통 농업 문화, 특별한 경관, 생물 다양성, 주민 참여 등 7개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며, 2021년 현재까지 16개의 유산을 지정하였다. 이 중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담양 대나무 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등 5개의 유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4년 이내이고, 사업비의 70~80%(사업별 상이)까지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로 국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는 노후 위험 시설 보수 등 안전 확보, 제래식 화장실 개선 및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노인 돌봄 등 휴먼케어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 농어촌 55개소 및 도시 30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농어촌 391개소, 도시 136개소의 대상지가 선정, 지원되었다. 대상지가 많은 시·도 순으로 보면 전남 103개소, 경북 80개소, 경남 79개소, 전북 59개소, 충북 51개소 순이다. 대상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비율,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슬레이트 주택 비율, 불량 도로(4m미만 도로)에 만 접한 주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이 완료된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 지구로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이 선정되었다. 충북 괴산군 관평마을, 전북 순창군 두지마을, 전남 화순군 구암마을은 우수 지구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은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빈집 정비, 마을 안길 확장 등 마을경관 개선,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마을재구조화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배교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쌀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선마을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도시 재생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은 2013년 제정 시행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 재생 을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시 재생은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 주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기존 도시 정비 사업과 달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 노후 지역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등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경제 기반형, 근린 재생형 등 두 개의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도시 경제 기반형은 산업 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과 연계하는 통합 재생 프로그램인 반면, 근린 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 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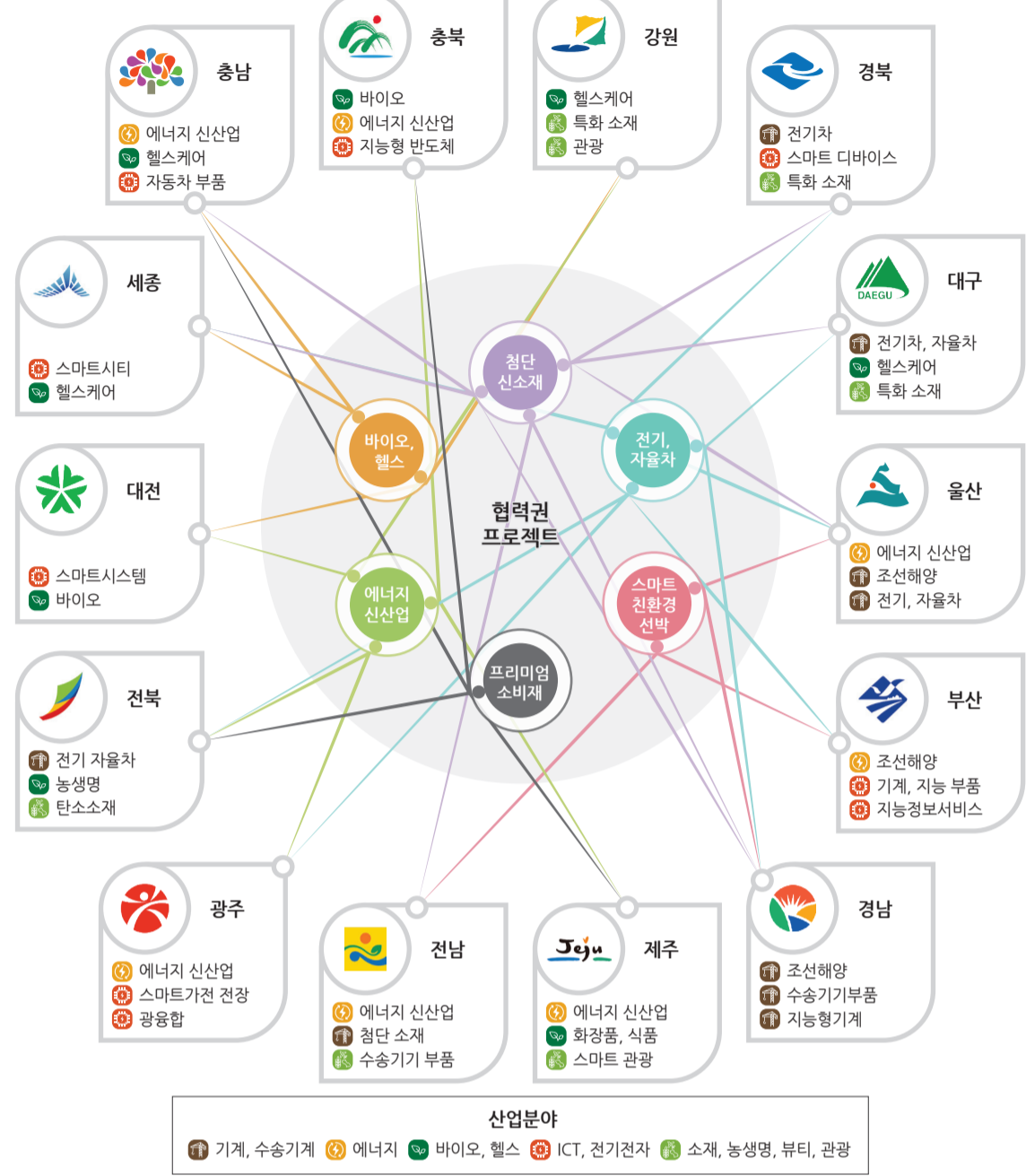
목 경제 살리기 등의 사업으로서 전자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았다. 2014년 5월 13개소의 도시 재생 선도 지역(도시 경제 기반형 2개소 근린 재생형 11개소)과 2016년 4월 33개소의 도시 재생 사업 지구(도시 경제 기반형 5개소, 근린 재생형 28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의 대상 지역은 인구 사회, 산업경제, 물리 환경 측면의 '최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는데, 2014년 2월 기준 해당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65%인 2,262개가 '최저 지역'으로 판정된 바 있다.

2017년 7월부터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이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8년 3월 향후 5년의 전략이 담긴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3대 추진 전략(도시 공간 혁신, 도시 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과 5대 추진 과제(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 구조대신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도시 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가 포함되었다. 사업이 개편되면서 기존 두 개였던 사업 유형은 우리 등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정부는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한 4개 지역(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에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8년 12월 산업부는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제조업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14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시·도별 주요 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 산업 발전 정책 프로그램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유형	위치
서울	마포구청	서강대학교	단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01호
	성북구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평로 211, 한성대벤처창업지원센터 B104호, 흥광실
경기도	고양산업진흥원	-	특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036, 고양종합터미널 4층
	의정부시청	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재)성남산업진흥원	-	단독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2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213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	경기도 포천시 호곡로 1007(선동면) 대전대학교 생활과학관 산학협력단 219호
인천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	단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청양대학 산학협력단	-	단독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라를 100호
부산	인천광역시청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단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벤처스퀘어 712호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금정구청	단독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길로 38-1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4층
울산	울산동구청	울산청정경제혁신센터	특화	울산 동구 방어진순대로 1138 8층
	울주구청	(재)울산테크노파크	단독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촌면 곡천동문길 31, 울주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	수성구청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1층
	달서구청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대구광역시 상인로 128 (필곡역사공원 內)
경북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북지관 3층
	칠곡구청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경북 칠곡군 공단로 1길 7 2층(칠곡군 중앙년기술창업센터)
광주	광주광역시청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독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45, 전일빌딩245 5층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동	전남 목포시 석현로 46 문화산업지원센터 1층
대전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1로 75번길 201호
	당진시청	충남산업융합원	단독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충남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산시청	단독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논산시청	단독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강원	(재)지혜의숲	춘천시청	단독	강원 춘천시 서청길32 해찬빌딩 3층
	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사로 377-3(오송동) 시원대학교 예술관 309호
충북	청주시청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단독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4, 2층
	익산시청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단독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70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전북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단독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1층
	(사)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	단독	전북 군산시 갈포3로 14, 6층
경남	김해산업진흥원생명융합재단	-	특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두루트로 80-16 3층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주남동) 영산대학교 코스모스관 3층 내
제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39번길 8, 경상국립대학교 내동캠퍼스 5층 509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통영시청	단독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인제로 197
제주	(재)넥스트밸런치	서귀포시청	단독	제주도 서귀포시 중정로 86 2층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 전주** - 수소상용차(버스, 트럭) 생산 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고속차 수출 복합 단지 조성 추진
- 세종** - 국내 최대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울산**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 생산
- 경남**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 광주** - 차세대 전력 산업 메카로 육성
- 전남** - 에이전트 기점화 추진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행 추진
- 전북** - 에어가전 기점화 추진
- 광주** - 광공 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 경기** - 에어가전 기점화 추진
- 포항** - 광공 SOC 투자 확대로 중소 강연업체 밀집 확보 지원

사회적 경제 혁신 단원

- 2019년 선정**
전북 군산, 군산시 옥구읍, (구) 생령초등학교, 경남 창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구) 동남건설사, (구) 동남건설사
- 2020년 선정**
대전 동구 대전시 동구 비례서로 62번길 47,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구 북구 대구시 북구 제3신입단지 내, (구) 삼명초등학교, (구) 삼명초등학교, (구) 삼명초등학교, (구) 삼명초등학교
- 2021년 선정**
강원 원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7-7, (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지역 산업 발전 정책 프로그램

-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소, 시도별 1개소)
- 메이커스페이스(전국 213개소) : 2018년 65개소에서 현재 213개소로, 2022년까지 35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문형(제조 창업 촉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일일창업(생물 맞춤형 약재 활용), 특화형(특정 분야 제조 창업 지원)으로 구성됨(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
- 스타트업파크(전국 2개소) : 스타트업, 벤처, 대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창업 밀집 공간으로서 인턴 스타트업파크 조성 완료 및 대전 및 충남(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중임
- 중장년기술창업센터(전국 33개소)

스마트혁신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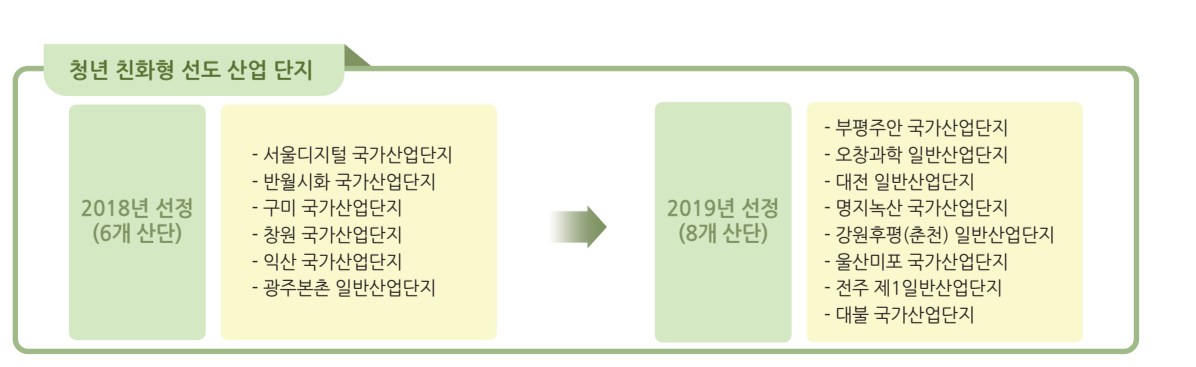
2019년 선정	2020년 선정	2021년 선정	2022년 선정
창원	남동	여수	부산
반월시청	구미	광주첨단	울산
		대구성서	군산

국가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 주력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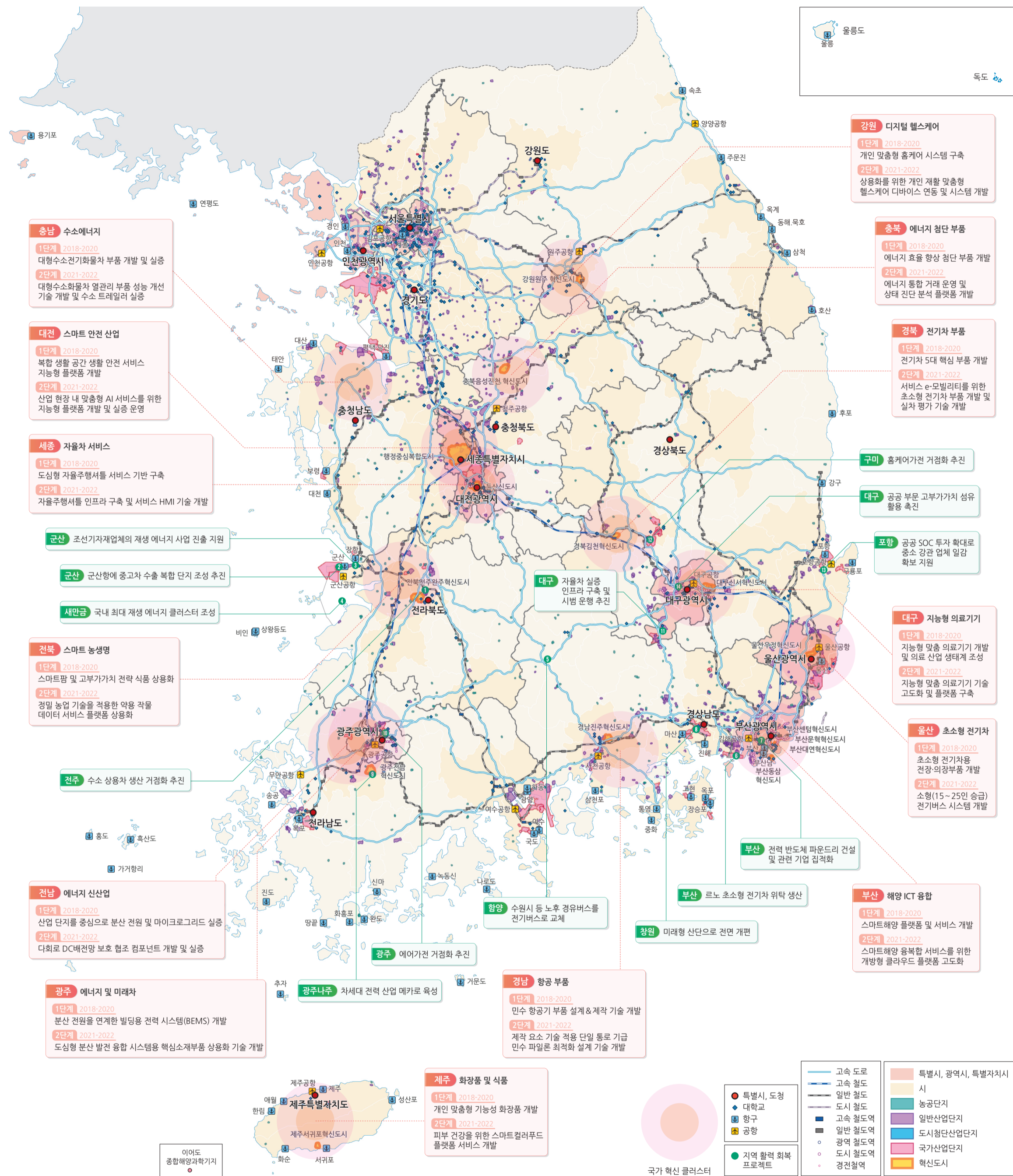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역 주력 산업 (48개)	
충북	대표 분야 : 혁신도시 (특화 발전 전략)	산업 단지, 특구	지역 주력 산업 (48개)
	에너지 첨단 부품	전주혁신도시 (태양광에너지)	39개 산업 등
충남	수소에너지	대전 R&D 특구 등	KAIST, ETRI, 충남대, 연구개발부총재단 등
	자율차 서비스 (세종시 일대)	전주혁신도시 (농생명융합)	14개 산업 등
대전	스마트 안전 산업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농생명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전북	스마트 농생명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스마트 농생명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전남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경북	전기차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전기차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대구	지능형 의료기기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지능형 의료기기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울산	초소형 전기차 (인원형 에너지)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초소형 전기차 (인원형 에너지)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경남	항공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항공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부산	해당 ICT 융합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해당 ICT 융합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제주	회로 및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회로 및 부품	전남 디지털 문화 콘텐츠	6개 산업 등

선도 산업 단지 범부처 지원

참여 부처	참여 사업
고용부	· 산업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재정 사업구축 교육 · 산연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 산업 단지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 고용 강령금 지원
산업부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 산업 단지 경영력 강화 · 산업 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 산업 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지원과 실용화 사업
국토부	·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 산업 단지 진입 도로 건설 지원 · 주차 환경 개선 지원
문화부	· 산업 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 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 산업·관광 복합 문화 재생 사업
환경부	· 공공공사 처리 시설 확충 · 산업 단지 환경 저류 시설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메이커 스페이스) · 스마트 공장 구축·보급
과기정통부	· 산업 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지원
산림청	· 산업 단지 주변 도시 숲 조성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산업 및 연구 시설, 배후 도시와 지리적으로 밀집한 혁신 거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부터 14개 시도에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 20km 내 총면적 15km² 규모로 지정된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지정 과제 및 지역 기업이 제시한 R&D 사업과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등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R&D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용 혁신 클러스터로 유지하고 혁신도시와 연계된 지역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한편 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된 14개 시도에는 '지역 균형 뉴딜' 정책

에 의거하여 2021~2025년 5년간 48개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2019년부터 사회적 경제의 협업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인적, 물적 거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협의회, 연대회의 등 여러 지원 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설계비, 건축비, 장비구축비, 시설부대 등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 단지는 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단지 내 지원 기관 입주를 허용한 유연한 산업 단

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R&D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을 정비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고용부는 기술사,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등, 산업 단지 수요에 맞춰 범부처의 정책 지원이 들어간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한국 산업 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산업 단지의 정보화과 함께 환경과 디지털이 융합된 혁신 산업 단지이다. 정보화된 물류, 통합관리센터가 구축되고 에너지 효율 등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시설들이 개발된다.

혁신도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작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였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입지를 기존 도

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형과 새로 건설하는 혁신도시형으로 구분하였고, 그해 10개의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였다. 2006년 6개(강원, 충북, 경북, 경남, 광주전남, 전북)의 혁신도시를 위한 개발 지구가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었고, 광역자치단체였던 대구와 울산 혁신 도시는 기존 개발 지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혁신도시

순위	위치	면적	고시일	사업 시행사	특화 발전 전략
강원 원주	강원 원주시 반곡동	3,458	2006. 10. 30.	2007. 10. 31.	한국토지공사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 음성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명동면	6,914	2006. 10. 30.	2007. 12. 17.	대한주택공사 태양광 에너지
경북 김천	경북 김천시 남면(용천리, 용남리, 옥산리), 농소면(일곡리)	3,477	2006. 10. 30.	2009. 09. 04.	한국토지공사 첨단 자동차
경남 진주	경남 진주시 흥남동, 양산읍(소동리), 금산면(속서리, 갈전리)		2006. 10. 30.	2007. 10. 26.	대한주택공사 항공우주 산업
광주 전남	전남 나주시 금천면(중앙리, 동덕리, 석전리, 신천리, 월산리), 산포면(매산리, 송림리, 신도리)	7,295	2006. 11. 23.	2007. 10. 26.	한국토지공사, 광주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에너지 신산업
전북 전주 완주	전북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9,260	2006. 11. 23.	2008. 03. 04.	한국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농생명 통합
대구 신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용암동, 상대동, 대림동, 유현동, 과천동, 사북동	4,216	2005. 03. 25.	2007. 09. 04.	한국토지공사 첨단의료 융합산업
울산 우정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강현동, 무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상안동, 북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2,797	2005. 05. 30.	2007. 09. 04.	한국토지공사 친환경 에너지 (핵심특화 등)
[동] 연도구 동동성	(1125번지)	616			
부산 [문현동] 문현동	(722-1번지)	113	2007. 12. 13		부산도시공사 첨단해양 신산업
[센텀]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61			
제주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도원, 법환동	1,141	2007. 09. 04.		대한주택공사 스마트 MICE

혁신도시의 건설과 2단계 발전 구상

	1단계(2007-2017)	2단계(2017-2027)	의의
경색목적	도시건설 지방이전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의 수호기능 강화(연구인력, 지식산업, 인제, 일지리 등)	도시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주체	정부 (Top-down)	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정부 (Bottom-up)	지역 주도 및 정부 지원
대상공간	혁신도시	지역 (혁신도시+모도시 +주변지자체)	대상공간 확장 (도시 → 지역)
정책대상	공공기관 및 총서자	공공기관 및 총서자, 지역주민, 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 중심 (공공기관 및 총서자 → 지역주체)
계도적 지원	건설 및 이전 지원	산학연 유치 협력	지원분야 확대 (건설 → 특화발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의 초기부터 그 취지에 맞게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2005년 5월 27일 '혁신도시 건설 관련 정부-지방 간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고,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 운영되었다. 또한 혁신도시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도시위원회 또한 정부부처 위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시장 등 지방정부의 참여도 허용하였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전계획, 도시건설계획, 도시 건설 후의 지역 발전 단계까지 함께 고려한 최초의 지역 발전 계획이었다.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후 시작된 혁신도시 시연2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마련한 기반 시설 건설과 정주 환경 개선을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었다. 혁신도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산업 정책이 가진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8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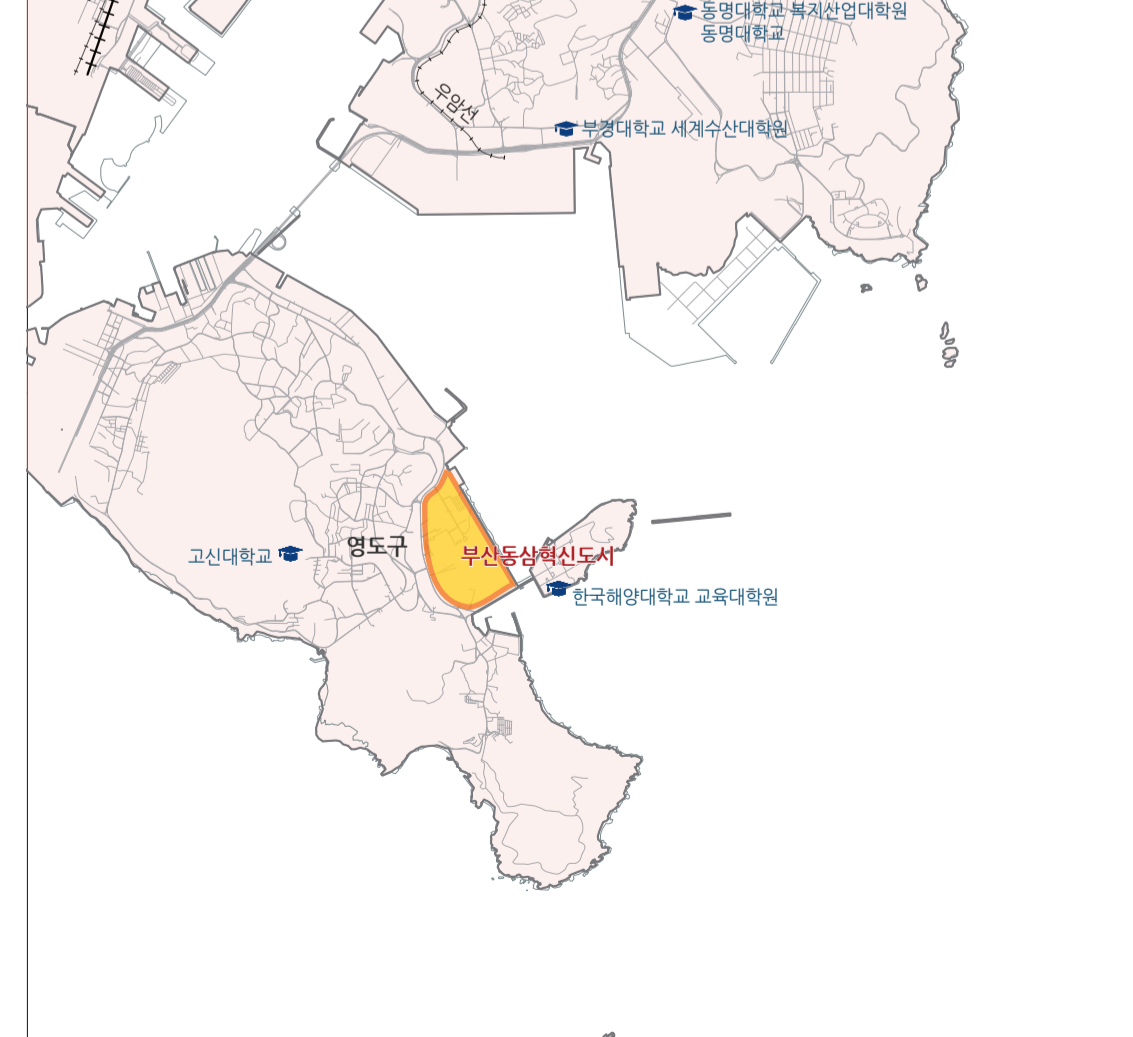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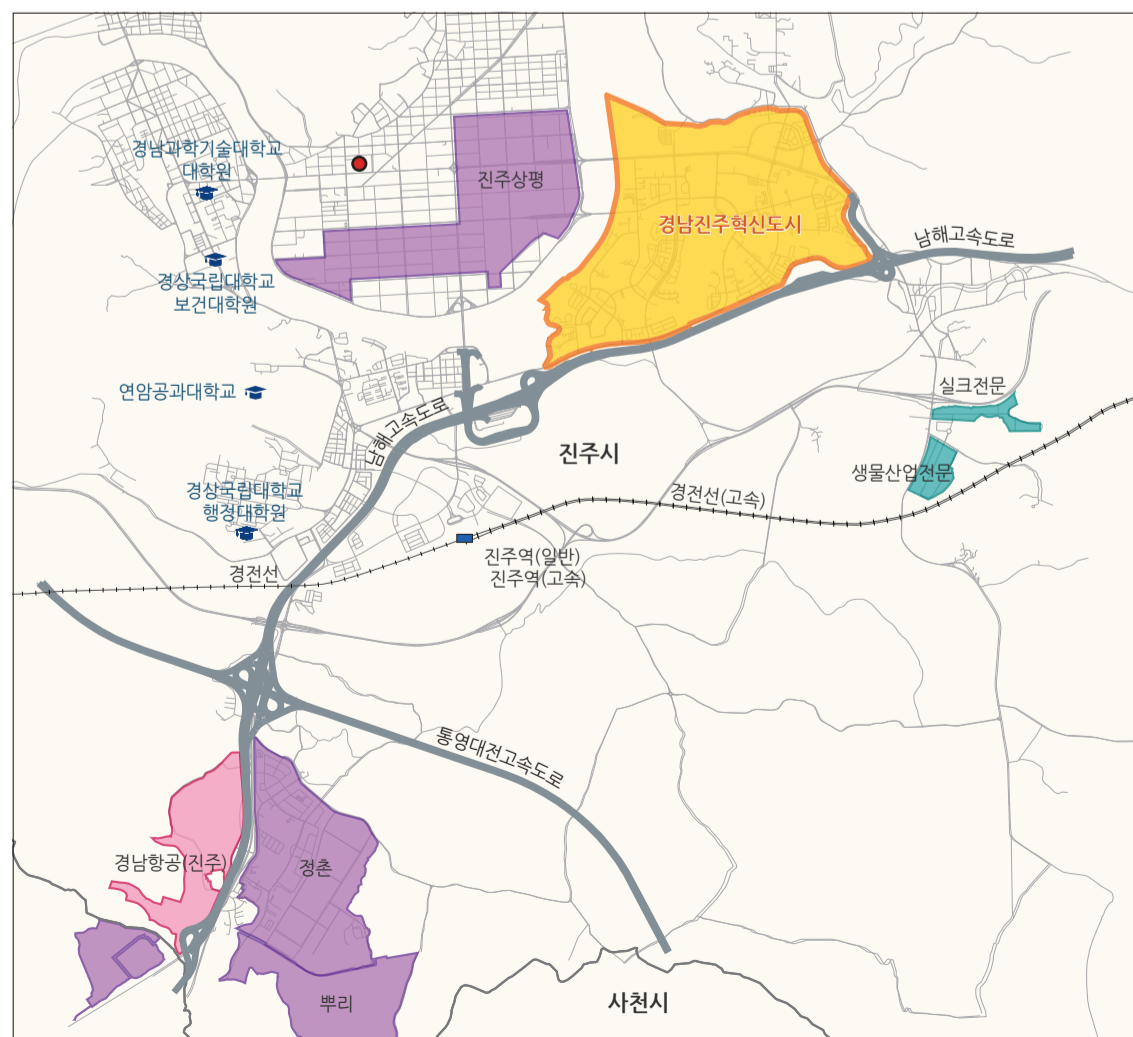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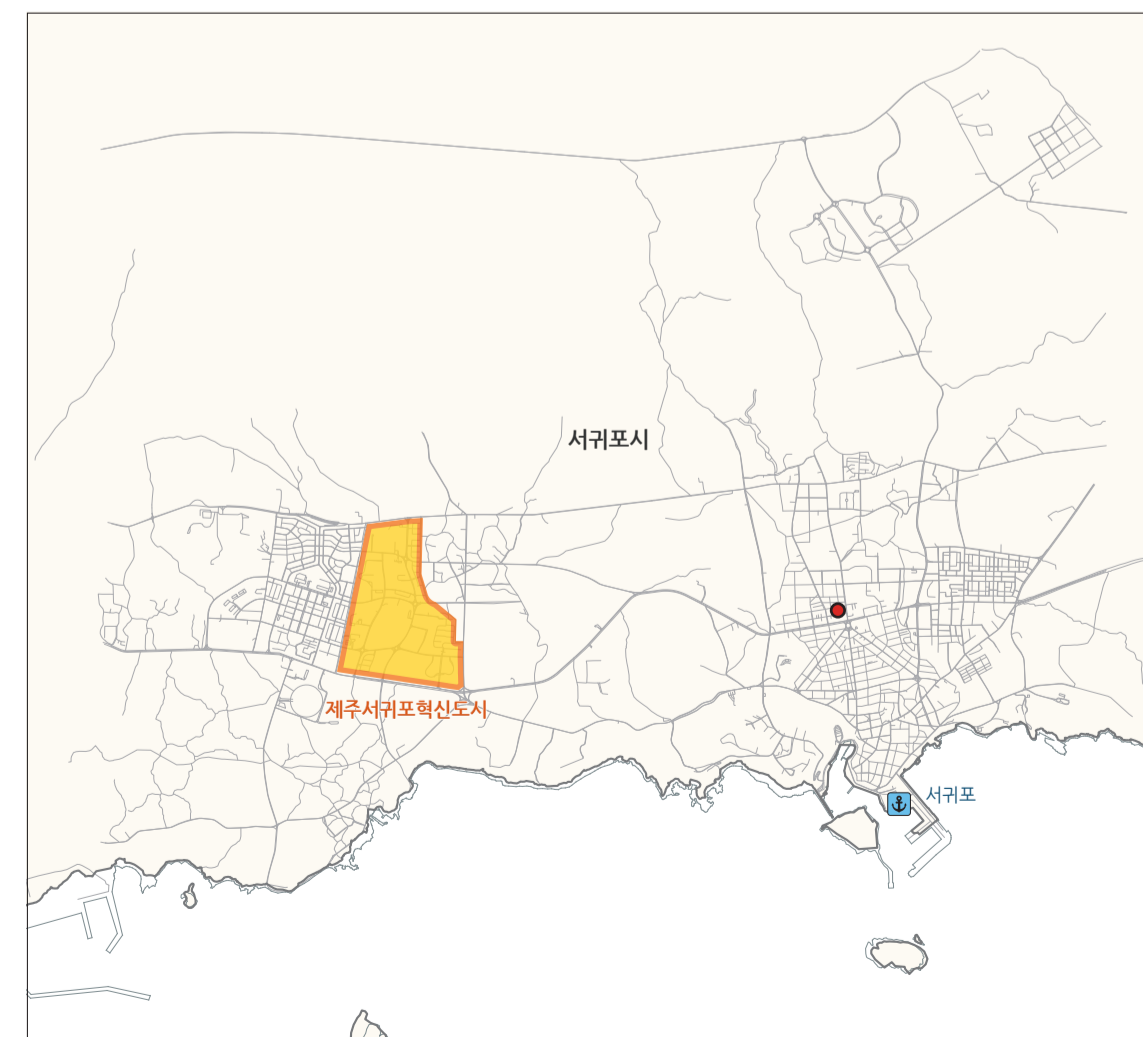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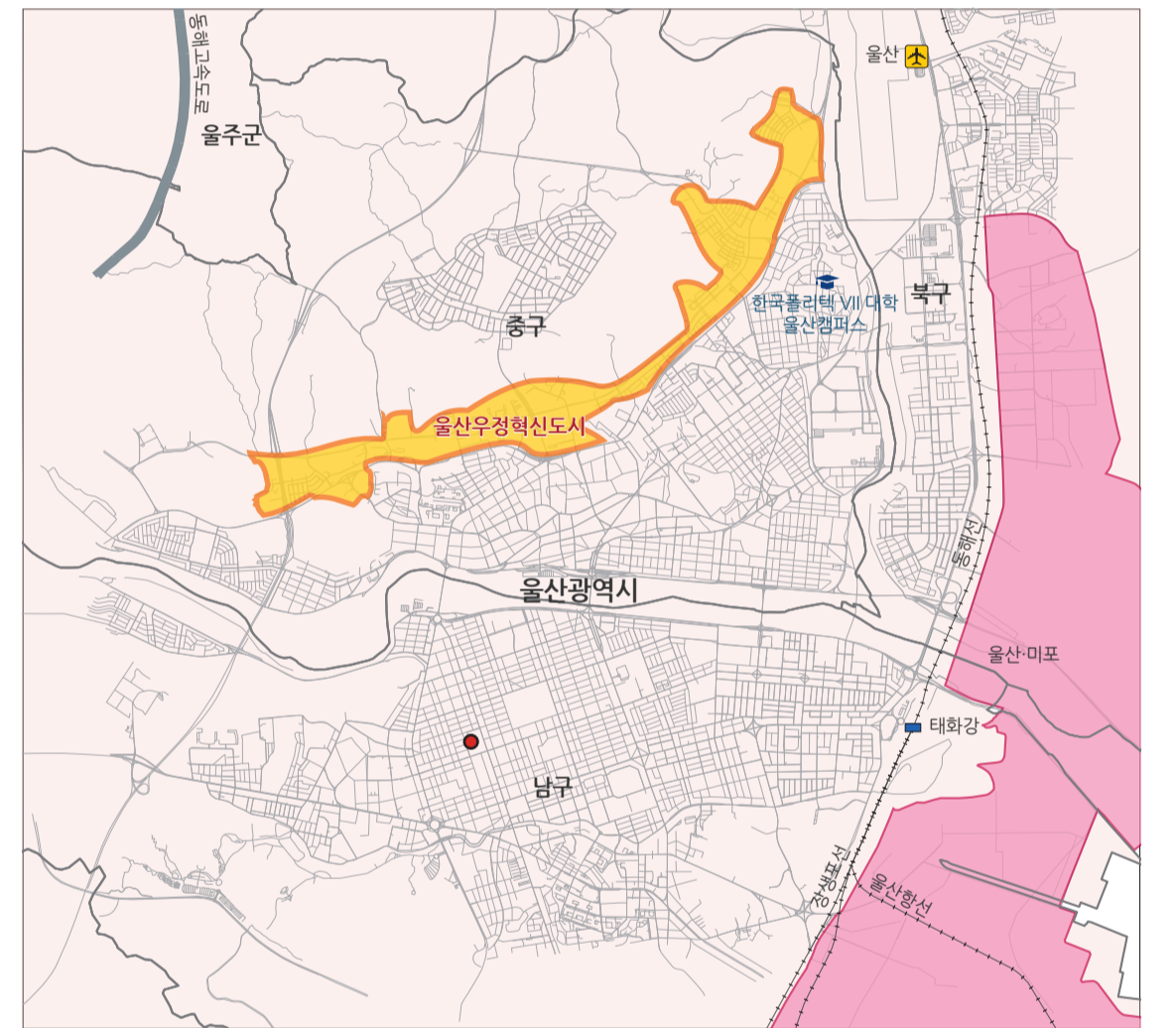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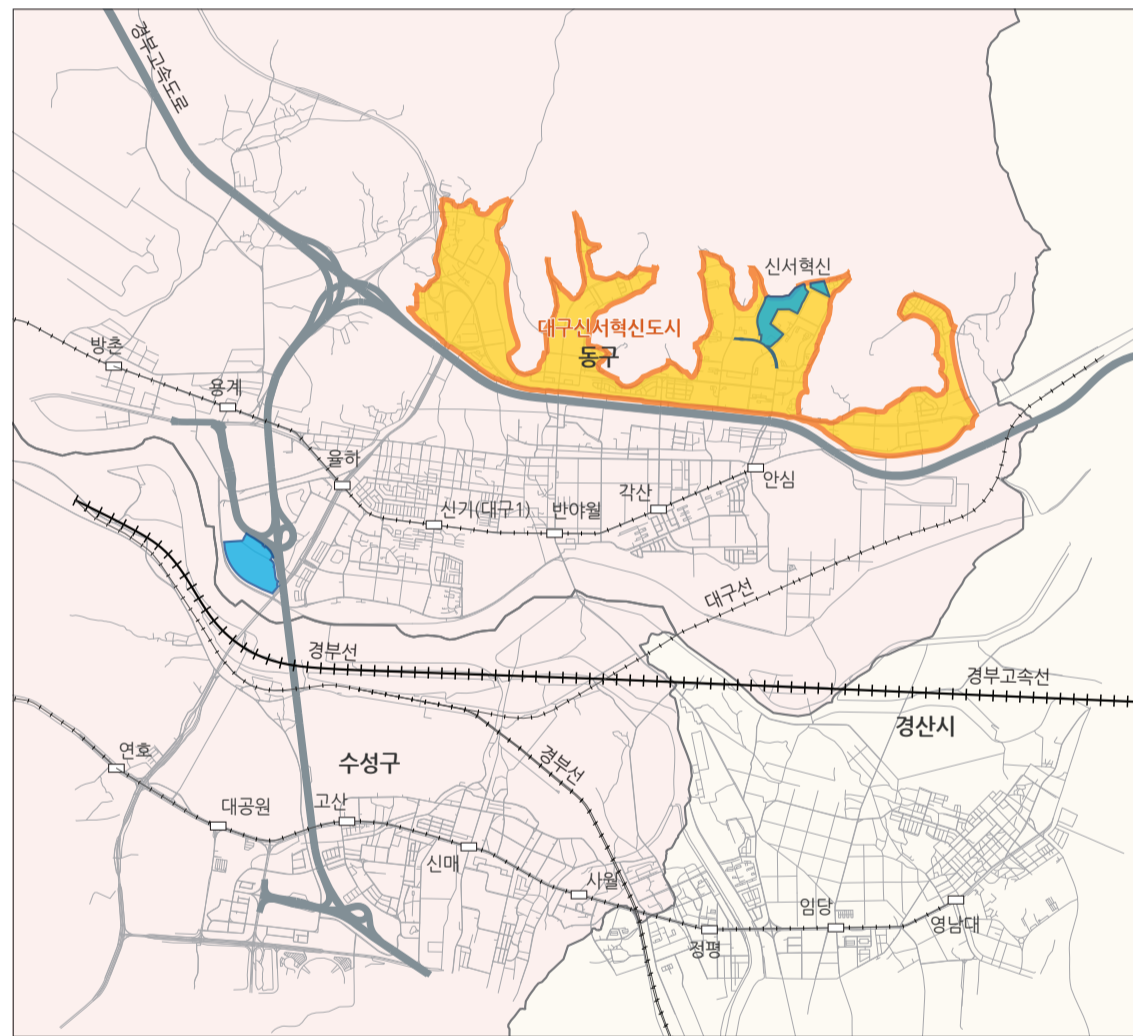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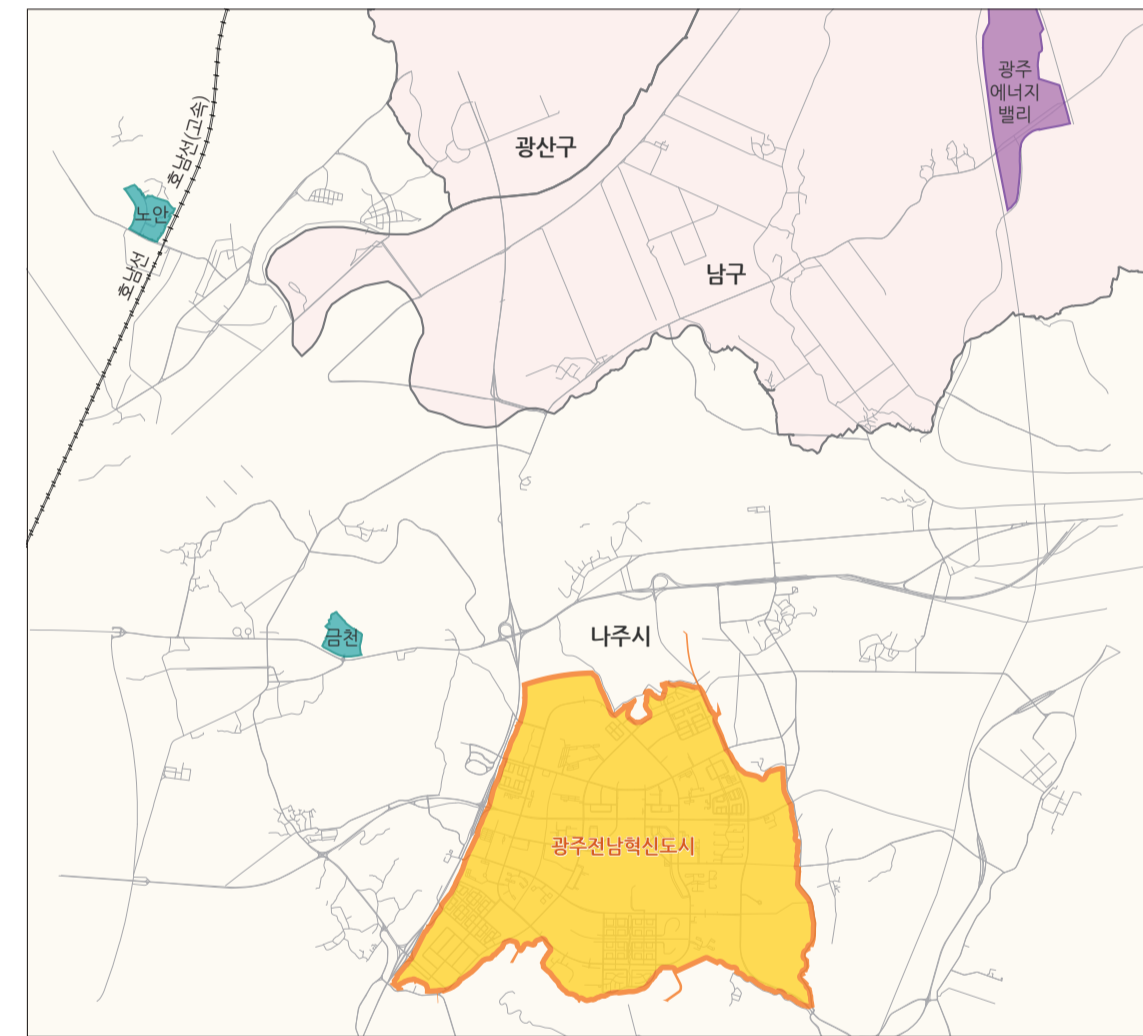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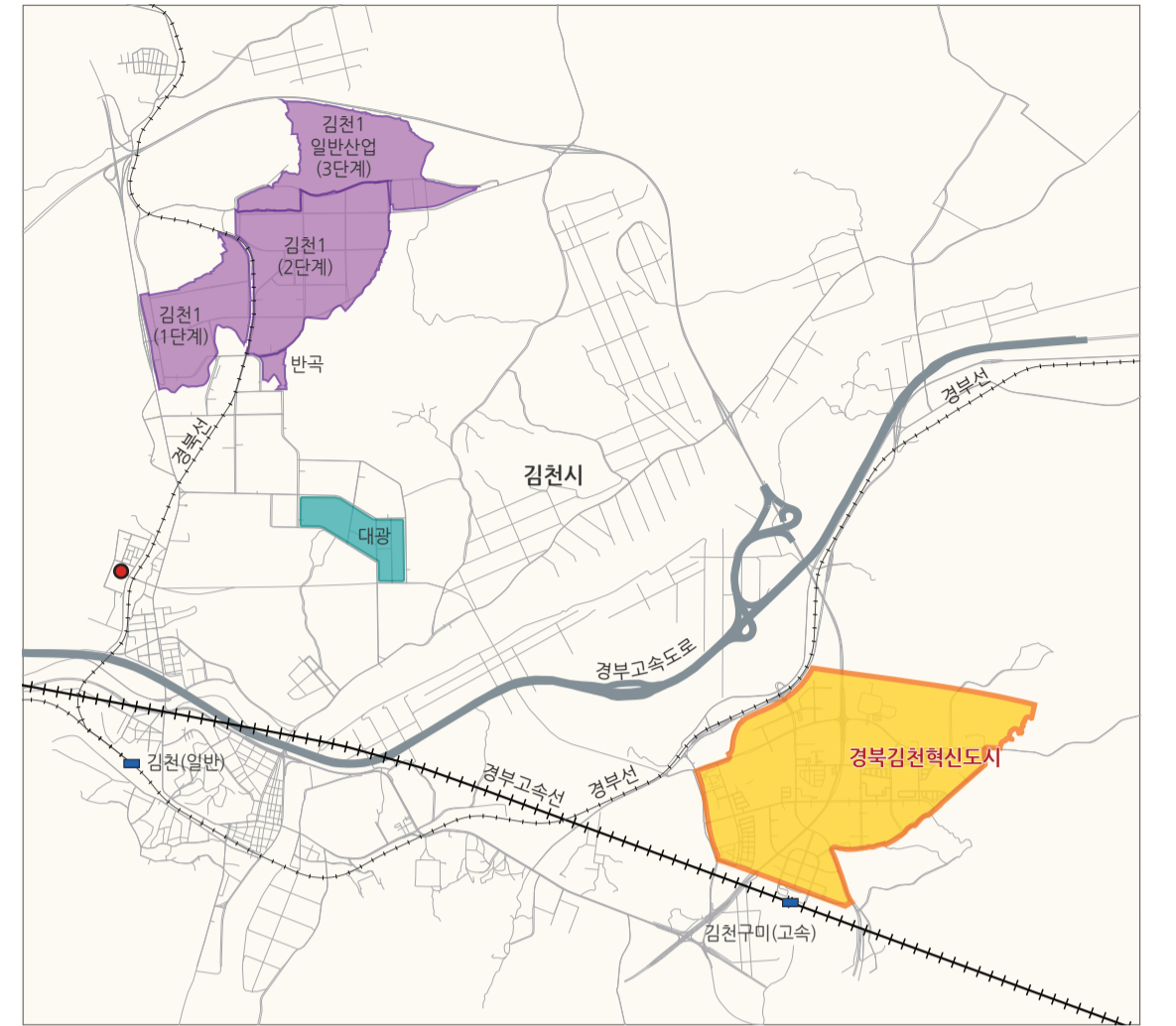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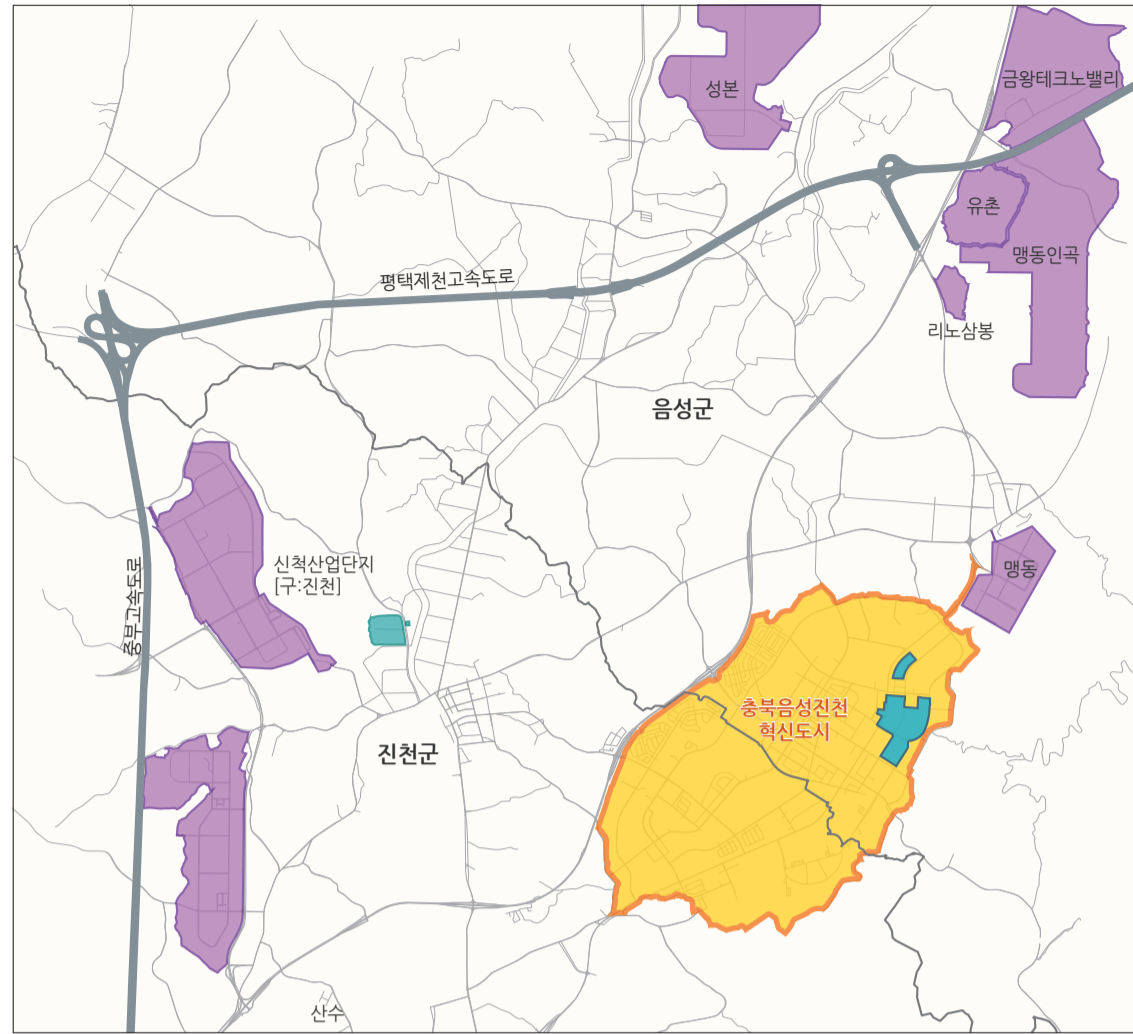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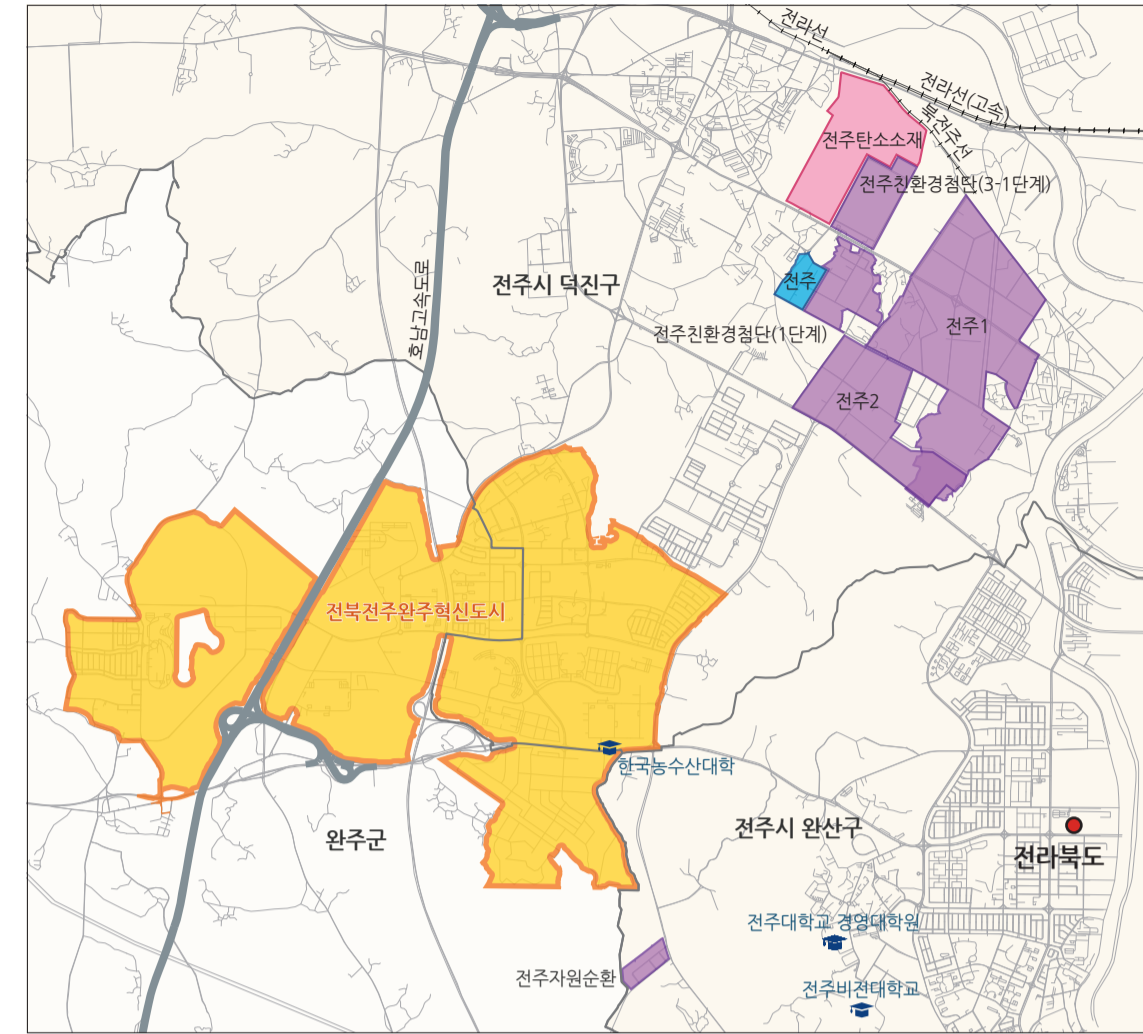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소속 기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총계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총계	44개	18개	47개	44개	
혁신도시	32개	15개	39개	26개	
부산 (13)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력금융공사, 한국청년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업유권자위원회, 해양금융융합지원, 영화진흥위원회	
대구 (10)	중앙신체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방정보시스템진흥원	한국시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6)	국립전북평면연구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본부전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공금단, 한국농촌진흥청, 농업농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재단	
울산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립연계연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제약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1)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 인제개발원		경북농수산진흥원, 한국소비지원, 한국교육진흥원, 한국기술개발원, 한국가산연공공사	한국교육개발원, 경북발전연구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전북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12)	기상청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국립농업진흥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인력개발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기술진흥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국가기술행정위원회, 한국과학기술진흥원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국제청년국제선생원, 국제청년국제선생원, 국제청년국제선생원, 국제청년국제선생원		국무위원연공금단		
오송 (5)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연구원		
개별 이전 (22)	아산 (4), 기타 (13)				
부산	[문현동] 문현동 (722-1번지), [센텀]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113, 61	2007. 12. 13, 2007. 09. 04.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첨단해양 신산업, 첨단해양 신산업
제주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도원, 법환동	1,141	2007. 09. 04.	대한주택공사	스마트 MICE

혁신도시 분포와 공공기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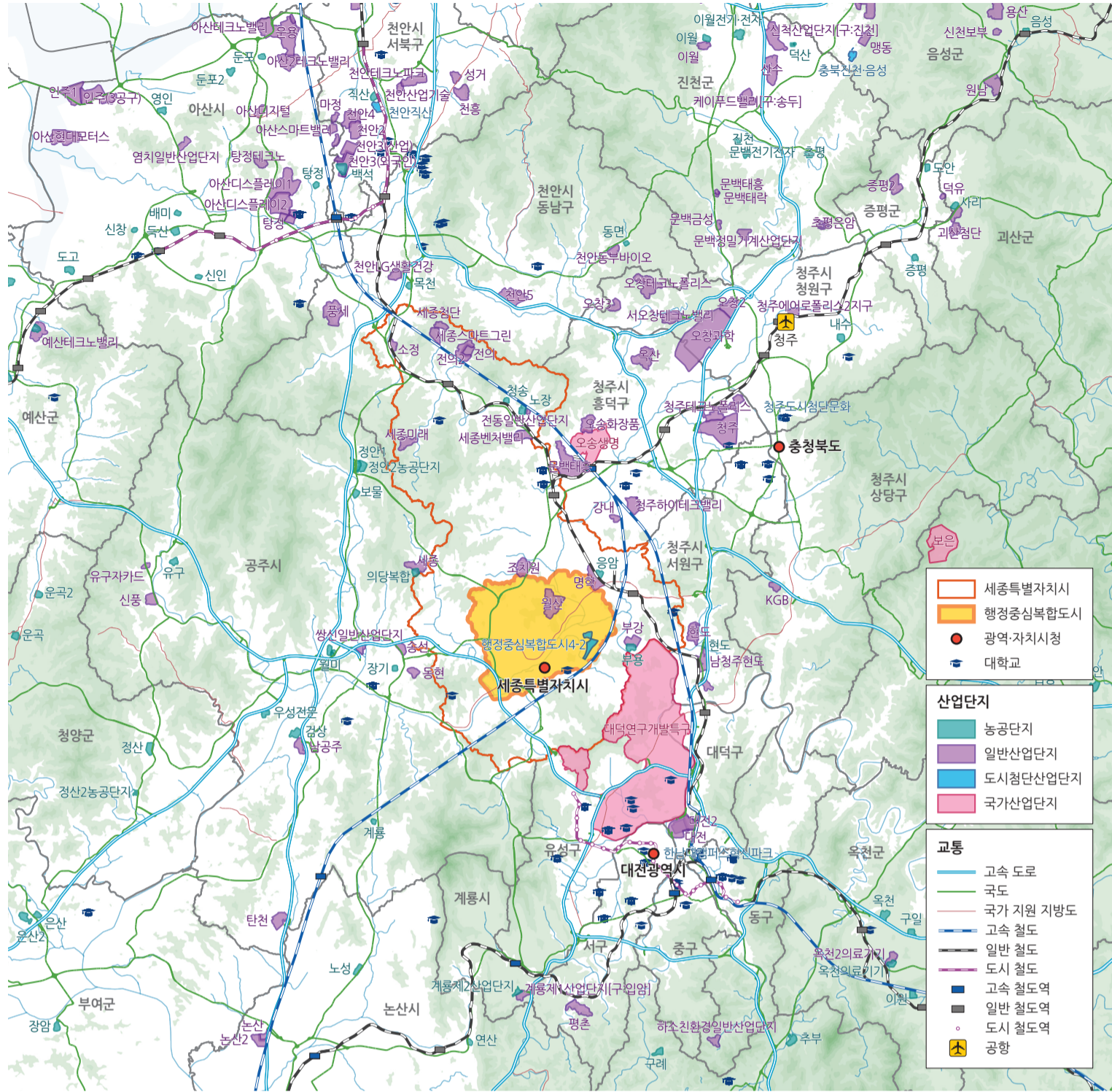


혁신도시별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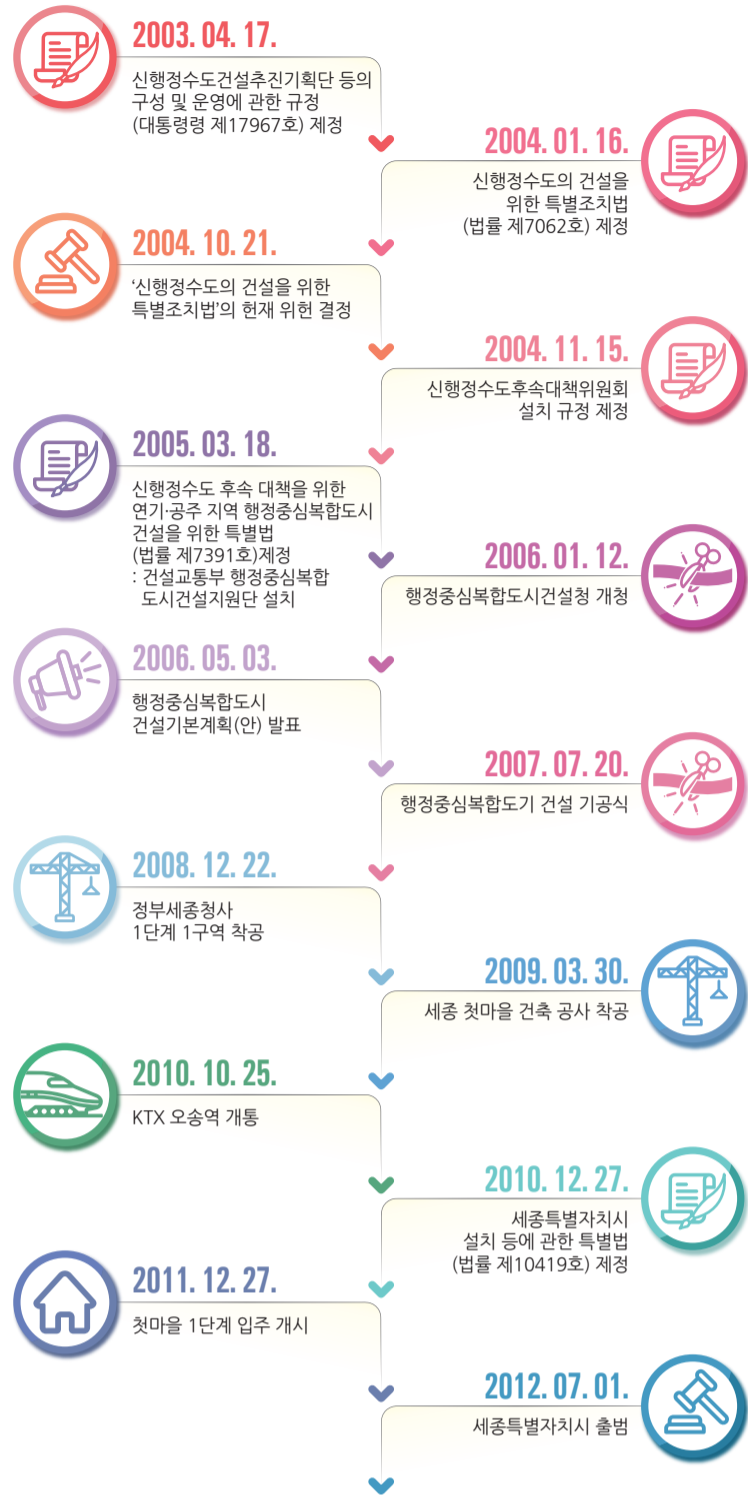


지방 분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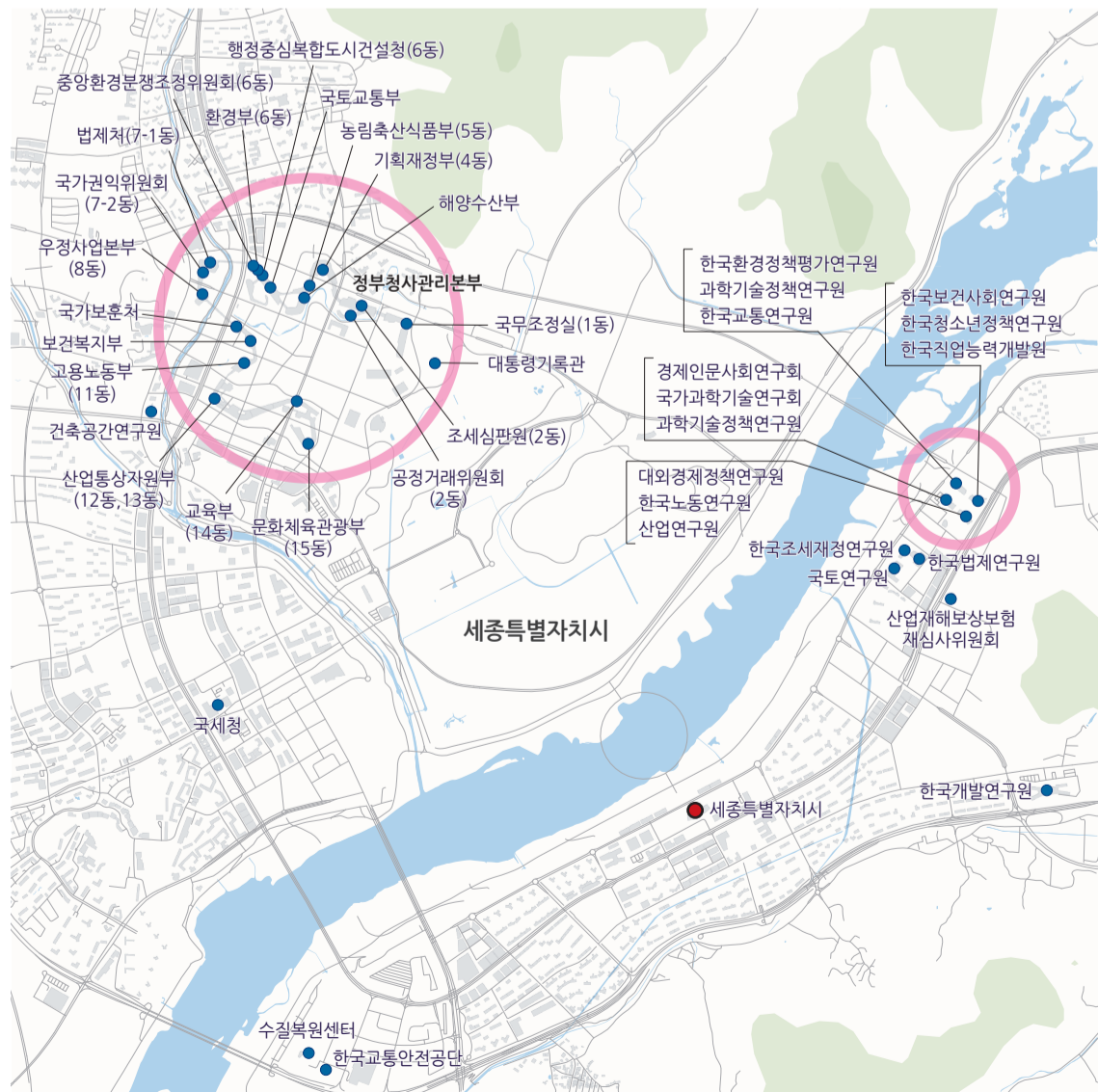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설치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행정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칭과 성격을 바꾸면서 주요 행정 부처의 이전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정책을 이어나갔다.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되었고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을 진행하였다. 2011년 '첫마을' 1단계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2012년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1단계가 완료되었고, 2013년과 2014년 중앙행정기관 2, 3단계의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정부세종청사는 2020년 말 기준 총 35개 기관(중

앙 부처 20개와 그 소속 기관 15개) 16,28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중앙 부처의 전체 공무원 수 746,267명의 2.2%에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뿐만 아니라 16개의 국책연구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여 1천 5백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기관 2만여 명의 직원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말 기준 세종시 전체 통사자 수 125,410명의 16%에 해당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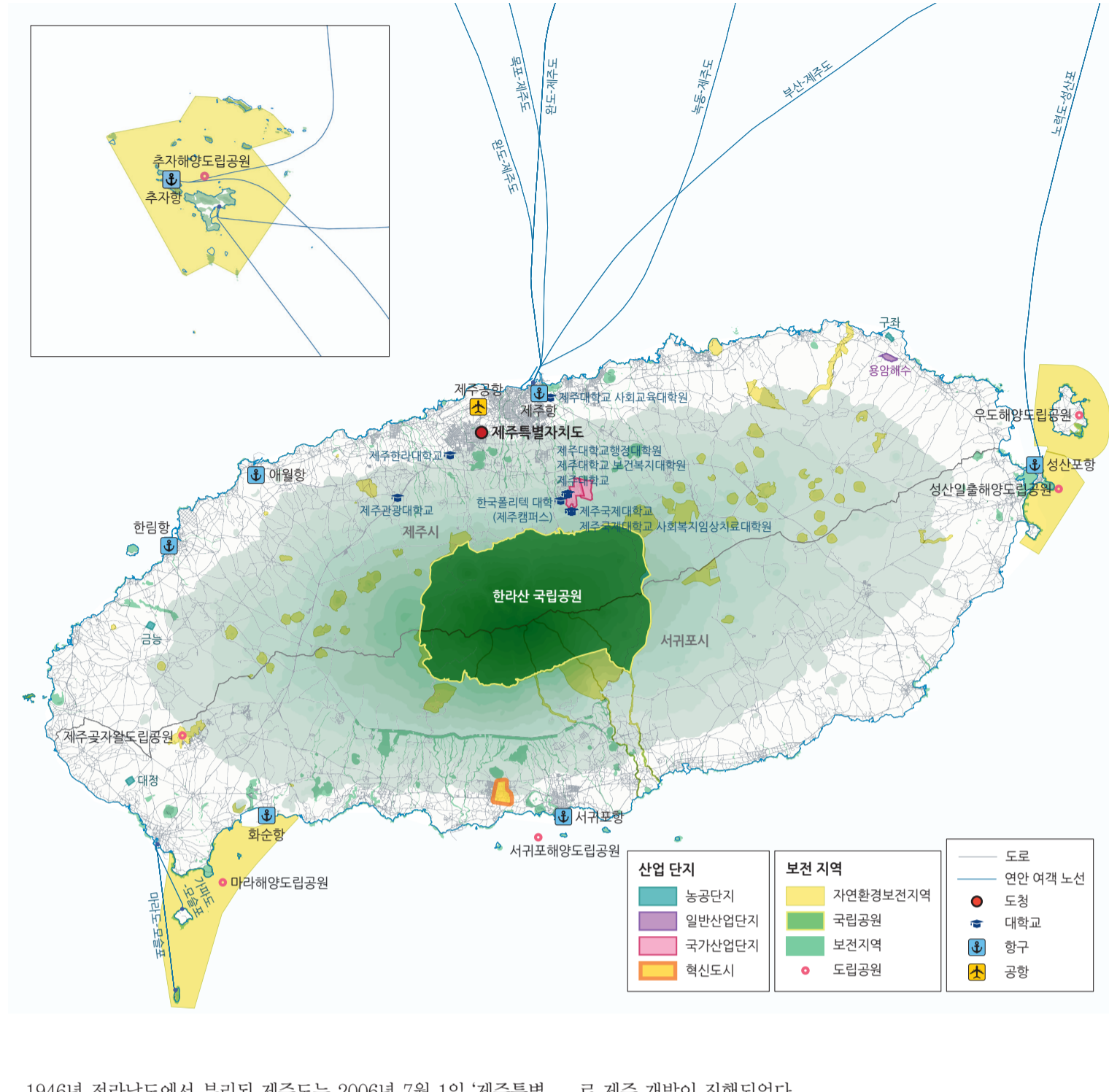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 현황(2020. 12. 31.)

기관명	위치(층)	연면적(m²)	근무자(명)	공무직 등 상시	
35개(중앙 20개, 소속 15개)		724,775	12,635	12,677	3,611
국무조정실(조직심판원 포함)	1동, 2동(4), 8동(7)	12,506	429	438	314
국무총리비서실			97	104	38
공정거래위원회	2동, 12동(4)	7,352	489	476	47
기획재정부(보건위원회 포함)	4동	17,820	1,100	1,062	184
해양수산부	5~①·②동, 4동(3.4), 6동(3)	8,927	601	643	62
농림축산식품부	5~③동	8,808	607	604	70
국토교통부(중앙토지위 포함)	6~①·②동, 5동(3.5.6), 13동(7)	19,370	1,047	1,139	90
행복도시건설청	6~③동	3,558	145	146	35
환경부(환경분쟁위 포함)	6~③동	8,306	613	715	90
법제처	7~①동	3,744	224	227	51
소청심사위원회	7~①동	1,056	35	35	4
국민권익위원회	7~②동	9,426	491	476	88
우정사업본부	8동	5,683	385	358	15
국가보훈처	9동	5,716	319	344	69
보건복지부	10동	12,265	857	687	319
고용노동부(중노위, 최저위 포함)	11동, 12동(4)	12,331	698	761	615
산업통상자원부(경자단, 광역등속, 무역위, 전기위 포함)	12~13동	15,016	989	869	223
교육부	14동, 12동(4), 13동(5)	10,058	656	650	266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위 포함)	15동, 14동(3)	11,446	745	777	139
국세청	2형사(16동)	14,127	891	968	24
행정안전부	2형사(17동)	8,349	619	607	23
소방청	2형사(17동)	2,942	219	243	76
한국정책방송원	2형사(17동)	6,424	117	109	180
정부청사관리본부	3층, 14-1동, 2형사	2,236	262	239	1,139
소계		207,466			
지원시설		176,096			
공용면적		255,480			
부속시설		8,086			
	세종컨벤션센터	22881			
	복합연의주차시설	54,766			
소계		517,309			

행정안전부(2021.)

제주특별자치도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방자치분권제도의 전환점이었다. 자치경찰,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 중앙정부의 권한 중 1,062건을 이양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 분권 정책의 시범 도가 되었다. 특히 자주적인 재정권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를 22개국에서 10여 개로 줄이고,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 도지사 간의 협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분권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였다.

제주도 개발 계획은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주도 자유항 또는 자유 지역 조성 검토를 그 시작으로 본다. 1964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권역별 계획에 따라 제주시, 한라산, 서귀포, 성산, 대정 등 5개 지역의 관광 거점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1966년에는 제주도가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2년 건설부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후속 조치로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으며, 1973년에는 국제 수준의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종료 이후에는 슬한 논란 끝에 국가 계획인 '특정지역제주도 종합계획'과 도 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점(2006년)

	일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행정 체계	관할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시, 군, 구, 청정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	기초지방자치단체 없이 행정시(하부 행정기관) 설치. 행정시장은 시선 예고 또는 개방형 모집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	우리나라 행정시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유일함.
법률안 제출요청권 부여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만 가능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가짐.	
조직 설계 자율성	총역인건비제도 적용	총역인건비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자율적으로 임제 등 행정조직 설치 가능	2003년 정부 혁신 지방 분권 로드맵에 따라 8개 부처 23개 책임 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처음으로 실시. 이후 2006년 지방자치단체로, 2007년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
교육자치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 교육위원을 간선으로 선출.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와 별도로 따로 구성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 직선으로 선출.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개정되어 타지역으로 교육자치제도 확산
자치경찰제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기구 설치. 도청에 자치경찰단(총경,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경정, 경감) 설치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기구 설치. 도청에 자치경찰단(총경,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경정, 경감) 설치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시에서도 전면 시행
감사	중앙부처 감사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고 협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세제	도세 7개 세목만 부과, 징수	시,군세 세목 9개 포함. 1개 특별자치도세 세목을 부과하고 징수함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원칙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음. 제주지방국도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중앙정부기관을 특별자치도 하부 조직으로 이관함.	

제주개발계획 연혁



국토해양부(2005), 제주연구원(2018)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그 환경 특성에 따라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별로 등급을 나누어 지정한다. 이외에 주요한 보전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2002년에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으며, 이 또한 제주특별법에 보전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면적은 해안선에서 5.5km 이내의 해양 구역을 포함하는 제주도 전체이고, 육상과 해양 각각 핵심 구역, 완충 구역, 협력 구역으로 구성된다(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6.06.30) 제주특별자치도 7월 1일 공식 출범